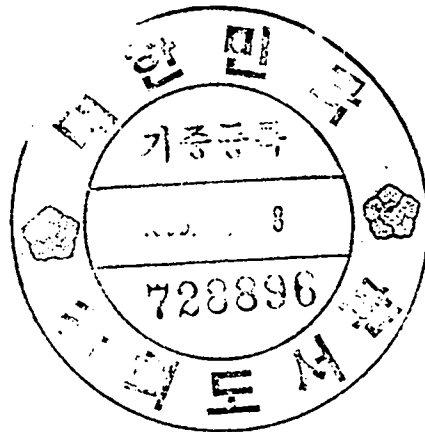


338.1851
L2936

21세기 농업정책방향

1997. 10.



농 립 부

목 차

제 1편 : 농정개혁 추진성과와 21세기 농업정책방향

I. 농정개혁의 주요성과

1. 그동안의 농정개혁 추진사항 개요
2. 주요 농정개혁 성과
3. 보완과제

II. 21세기 농업정책방향

1. 21세기초의 농정여건
2. 21세기 농업정책방향

III.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

1. 농촌투융자의 효율성 문제
2. 추곡수매 및 적정 식량자급율의 유지
3. 농지보전 및 이용
4. 농가부채
5. 농가인구의 감소
6. 농업재해지원
7. 농어촌 의료환경개선
8. WTO 이행특별법시행령 제정

제 2편 : 산업별 경쟁력 제고대책방향

쌀 산업

- I. 쌀산업의 구조변화와 향후 전망
- II. 쌀산업 경쟁력제고대책 평가 및 성과
- III. 경영사례 비교
- IV. 주요 보완과제
- V. 2단계 쌀산업 경쟁력제고대책 추진방향

축 산업

- I. 축산업 현황
- II. 경쟁력강화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시책
- III. 추진성과와 보완과제
- IV. 우수 경영사례 분석
- V. 향후 축산여건 변화와 전망
- VI. 경쟁력강화를 위한 축산정책 추진방향
- VII. 양축농가의 경영방향

원예특작산업

- I. 원예특작산업 현황
- II. 경쟁력강화를 위한 그간 추진방향
- III. 추진성과와 보완과제
- IV. 경영 우수사례 분석
- V. 원예특작산업의 여건변화와 전망
- VI. 원예특작산업의 정책방향

여 백

< 제 1 편 >

농정개혁 추진성과와 21세기 농업정책방향

여 백

I. 농정개혁의 주요성과

1. 그동안의 농정개혁 추진사항 개요

가. WTO체제의 기본적 대응방안 마련

□ WTO체제의 출범은 경쟁논리가 지배하는 무한경쟁시대를 의미

- 외국 농산물의 수입을 임의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관세화에 의한 농산물의 수입자유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음.
- 국내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종래의 정부주도, 규제중심의 시책에서 벗어나 민간이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 기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

□ WTO체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완전경쟁을 상정하되, 대책은 현실적·단계적으로 추진

-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경영규모 확대 등은 타산업분야에서의 취업 기회 확대와 직결되는 만큼 전체 국민경제의 성장 전망, 목표와 조화 시켜서 추진
- 농가의 경영구조, 기술수준, 경영능력, 시장개방 수준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시간개념을 갖고 접근
 - 1단계 : 규모화, 전문화, 상품화 기반구축
 - 2단계 : 보다 고도화된 선진 산업구조로 탈바꿈

□ 이러한 정책기조하에서 농정시책, 제도, 법령 및 정책담당자의 인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개혁을 과감히 추진

- 경쟁을 기반으로 한 체질강화, 통제보다는 자율을, 정부 주도보다는 농업인의 창의를 더 유발되는 방향으로 혁신

< ※ '94수립 WTO대응 주요정책 체계도 >

[농어업 보호·육성시책]

□ **재원확보**

- 42조원의 조기 투자 및 15조원 농특세 신설

- 농어촌발전 대책수립 ('94.6)

경쟁력제고 → (10대시책)

- 농업구조개선대책
- 품목별 경쟁력제고대책
- 제도개혁
 - 양정제도('93.8)
 - 농지제도
 - 시장·유통제도('94.10)
- 법령·기구정비 (개혁 뒷받침)
 - 구조개선
 - 규제완화
 - 조직·기능

농촌생활개선 → 도로, 주택, 상하수도 보급확대

농업인복지증진 → 교육, 의료, 연금서비스 개선 (농특세 10년계획 + 기존예산)

[무역정책보완·정비 시책]

□ **수출입관리제도 개선**

법령정비

(관세법, 양곡관리법 등)

- 동·식물검역기능강화
- 원산지표시제 강화
- 국영무역, 쿼타공매제 도입
- 관세제도 개편(TE, 종량세 등)
-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SSG) 도입
- 농수산물수출진흥종합대책 강화

나. 농정추진방식을 개방된 시장경제에 맞게 자율경영을 뒷받침 하도록 개혁

□ 각계의 중지를 모아 중장기 농정의 기본틀로서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방안」을 수립 ('94.6)

○ 대책수립을 위하여 농업인단체 대표, 대학교수, 언론계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 각계의 인사가 참여한 『농어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대책을 건의

-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정책심의회』에서 15개 부처가 범정부적으로 참여, 농발위 건의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

○ 농업구조개선뿐만 아니라 농촌생활환경, 의료·교육 등 농업인 복지 증진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 시·군별 농어촌발전계획을 기초로 한 상향식 농정추진체계의 확립

○ 국가단위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군별로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

○ 농업인의 신청과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농업인단체의 역할분담체계 확립

○ 중앙정부 : 기본정책수립, 농업기반 확충, 제도정비 등 담당

○ 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리, 지역사업의 종합조정을 주관

○ 농업인·단체 : 단위사업의 선택, 효율적 농업경영을 책임지고 수행

□ 사업 추진에 있어서 농업인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존중

- 『농림사업실시규정』을 제정, 모든 사업을 농업인에게 공개하고 농업인의 사업선택의 기회를 확대
 - 농업인의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상담제』 실시
- 사업대상자의 선정은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 대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

- '96년 이후 2차례에 걸쳐 농림사업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보완대책을 마련
 - 예 : 쌀산업 발전종합대책, 한우산업 발전종합대책, 수출농업 육성대책 수립 등

다. 시장경쟁 여건조성을 위해 농지·양정 등 주요 농정제도를 개혁하고 경영상 애로가 되는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 농업인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농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농지개혁 이후 40년만에 농지법을 제정하여 농지제도를 전면 개편

- 진흥지역내에서는 소유상한을 폐지
- 20km 통작거리제한을 폐지, 거리에 관계없이 농지소유 허용
-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주식회사는 제외)

□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유통 활성화를 위한 양정제도의 개혁

- 농가가 시중에 판매하는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전년 수확기와 이듬해 7~8월 간의 쌀값의 계절진폭을 허용
-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쌀 생산·유통을 계열화 하고 산물수매를 확대(RPC : '96까지 220개소 설치)
-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사전에 예시하고 봄철에 선도금을 지급하는 약정수매제 도입
- 양곡매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소포장 양곡의 자유매매를 허용하는등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 농산물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장·유통구조를 혁신

- 미곡종합처리장, 포장센터 등 새로운 산지유통시설과 소비지 유통시설을 확충
 - '96년까지 포장센터 49개소, 도매시장 15개소 개장·운영 등
- '95년부터 상장경매가 어려운 일부품목을 제외한 전품목 상장거래를 의무화하여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유도

□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이익보호를 위한 협동조합 개혁

- 중앙회장의 자격을 조합원으로 제한하고 이사회에 조합장 출신 비율을 확대(조합장 1/2 → 조합장 2/3이상)
- 복수조합원제를 도입하여 1가구에 2인까지 조합원 가입 허용
-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생산·출하조절, 시장개척등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산물 17개 품목, 축산물 4개업종등 전문조합 설립
- 중앙회의 사업을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으로 분리하여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도록 하여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촉진

□ 농업인들의 담보능력 부족해소 등을 위해 대출제도를 개선

-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10년간('95~2004) 매년 700억원씩 정부가 출연('95~'97간 2,200억원 출연)
- 농업인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1인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손보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온실·축사등 농업용 시설에 대한 후취담보제도를 활성화

□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 : '93이후 총 392건

- 예 : 농업인은 허가대신 신고만으로 식품제조·가공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42조원 구조개선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기고 15조원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하는 등 확실한 재원을 마련하여 대책 추진을 뒷받침

□ 42조 사업은 '97년까지 국고기준으로 투자목표(35조 4천억원)의 78%에 해당하는 27조 5,887억원을 투자

- 잔여사업비 7조 8,090억원을 '98예산(안)에 확보 (9.10 현재), 당초 계획대로 '98년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할 전망

□ 15조 농특세사업은 '97년까지 목표의 33%인 약 5조원 투자

- ※ 농촌발전을 위해 특별세를 신설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

□ 이에따라 농림사업 지원규모는 '92년 2조 8천억원에서 '96년 7조 4천억원으로 2.6배가 증가

마. 주요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을 수립·추진

- 품목별 경쟁력제고를 위해 쌀산업 경쟁력제고대책, 축산업 경쟁력제고대책, 원예산업 경쟁력제고대책, 가공·수출산업육성 대책 등을 수립·추진

< 쌀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

-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로개설 등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 전업농, 농업법인 등을 중심으로 경영규모를 확대
- 중·대형 농기계 중심으로 주요 농작업을 완전 기계화
- 우리 국민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품종 육성·보급 확대

<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

- 주산지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기계화·시설 현대화를 통해 규모화된 전업적 경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
- 생력 기계화 기술과 우수 품종개발을 적극 추진
- 시설 채소·화훼 등은 주산지에 생산·유통시설을 종합지원하여 수출 산업으로 육성
- 고추·마늘·양파 등은 품목별 조직을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 및 자율적 수급조절 유도

< 축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

- 축종별로 경쟁력 있는 전업농가 집중 육성
- 축산물 종합처리장 중심으로 생산·도축·가공의 계열화 체계 구축
- 지육·냉동육 유통체계를 냉장육·부분육·브랜드육 유통으로 발전
- 가축개량 촉진을 위해 한우개량단지, 종돈장 등 지원 강화

< 농산물 수출종합대책 >

- 수출농업단지조성 등 안정적 수출농업기반 구축
-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활동 강화
- 농산물 수출보험제도 도입 등 수출지원체계 개선

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수출입관리 제도를 개선

□ 외래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동·식물 검역기능을 강화

- 검역조직·인력을 보강하고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
- 검역관련 규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보완

□ 저질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농업인 보호를 위해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

-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

□ MMA 등 시장접근 물량에 대한 효율적 수입관리 방안 마련

- 쌀·보리, 고추 등 국영무역 품목은 유통공사·축협 등으로 수입 창구를 단일화
- 돼지고기·닭고기 등은 수입권 공매제도를 통해 가격차를 정부가 흡수 - 수입 이익금은 농안기금, 촉발기금 등에 납입, 경쟁력 제고에 활용

□ 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관세제도를 개편

-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조정관세, 할당관세 등 탄력 관세제도를 활용
- 저가 농산물의 수입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종량세 제도 도입 (고추·마늘·양파 등)

□ 특별 긴급피해구제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 농산물수출 확대를 위해 「농림수산물 수출진흥종합대책」 수립·추진

< 과거 농정과 '94 추진방식 개혁과의 차이점 >

구 분	과 거	개 선
○ 기본정책수립	○ 정부 주도로 수립	○ 농업인단체를 포함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
○ 재원마련	○ 매년 예산으로 확보	○ 42조 조기투자 및 15조 농특세 신설 등 확실한 재원을 확보
○ 지자체계획수립	○ 중앙에서 획일적 으로 시달	○ 지역주민 의견수렴, 시·군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심의, 지방의회 심의 등 중지를 모아 수립
○ 사업시행지침	○ 담당공무원 이외의 일반인에게는 폐쇄	○ 농림사업실시요령을 통해 사업지침을 모든 국민과 농업인에게 공개
○ 사업대상자 선정	○ 행정기관 내부에서 선정	○ 사업신청을 한 농업인에 대해 기술·경영능력, 대출 상환능력 등을 지도소와 대출기관이 사전심사한 후 농발심의회에서 공개적으 로 선정
○ 사업평가	○ 개별적으로 평가	○ 종합적으로 매년 평가
○ 지도·감사	○ 사안별로 실시	○ 농림사업 전반에 대해 실시
○ 평가결과의 시책 반영	○ 부분적으로 반영	○ 종합적으로 반영

2. 주요 농정개혁 성과

- 농촌 투자의 확대와 제도개혁 등에 힘입어 규모화된 전문 경영인이 증가하고 농가소득이 늘어나는 등 구조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
- 농업인들도 UR당시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우리도 노력하면 개방화의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

(1) '90년까지 정체상태에 있던 농업성장율이 최근 빠른 성장세 회복

- 농림어업 성장율(3년 이동평균) : $\frac{\text{'85~'90}}{\text{연 0.24\%}}$ $\frac{\text{'90~'95}}{\text{연 1.12\%}}$
 - 특히, '93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94년 이후 빠르게 회복되는 추세
- '90~'95년간 농림업취업자 1인당 생산성증가는 연평균 6.2%로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른 증가율을 보임

< 취업자 1인당 생산성의 변화(불변가격, 3년 이동평균) >

	농 립 업	제 조 업	산업전체
'85~'90년 평균(%)	3.15	5.44	6.03
'90~'95년 평균(%)	6.23	8.87	4.83

(2)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농가경제도 건실화되고 있음.

- 농가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농외소득원도 다양화됨
 - '96년 농가소득은 2,330만원으로 '90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하여 GNP성장(1.7배)보다 빠르며, 3천만원 이상 농가도 27% 점유
 - 농외소득 비중 : ('90) 25.8 → ('96) 32.1%

- 농가소득 증대에 힘입어 농가경제도 건설화 되어가고 있음
 - '96년 농가 평균 저축액은 1,570만원으로 부채 1,173만원을 상회
 - 62%농가는 저축이 부채보다 많고, 부채없는 농가도 19%에 이룸
 - 38% 농가는 부채가 저축보다 많으나 전체적으로 부채중에서 78%가 생산성 부채이며, 농가자산이 부채를 크게 초과하여 상환여력도 개선되고 있음

(3)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농업경영체가 크게 증가

- | | '90 | '95 | |
|-----------------|--------|--------|--------|
| ○ 쌀 3ha이상(호) | 17,758 | 34,186 | (1.9배) |
| ○ 돼지 500두 이상(호) | 1,328 | 3,463 | (2.6배) |
| ○ 시설면적 2천평이상(호) | 5,952 | 16,995 | (2.4배) |
-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높은 소득을 올리는 농가수가 '90년도에는 0.1%도 안되었으나 '96년도에는 5.1%로 증가
 - 2천만원 미만 농가 비중은 '90년 91.5%에서 '96년 47.5%로 감소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기계화도 진전

- 논 경지정리율 : ('90) 64% → ('96) 79%
- 벼농사 기계화율 : ('90) 78% → ('96) 97%

(5) 농업인의 자율적인 경영개선 등에 힘입어 품목별로 생산비가 크게 절감되거나 생산비 증가율이 둔화

- 주요 품목의 비용증감율(kg당 기준, %)

	'85~'90	'90~'95
- 쌀 생산비	19.6	△18.4
- 한우 비육우경영비	35.5	△4.4
- 비육돈 경영비	△6.9	△27.5

(6) 수출품목과 물량이 점차 확대되어 수출농업의 가능성 확인

- '90년 들어 정체되었던 농림산물 수출이 '94부터 연평균 13% 증가
 - 수출액(백만\$) : ('93) 1,264 → ('96) 1,829
- 돼지고기, 김치, 화훼등은 수출산업으로 점차 자리를 굳혀가고 있음
 - 돼지고기 : ('90) 20.5 → ('96) 194.0백만\$
 - 채 소 류 : ('90) 25.1 → ('96) 84.8백만\$

(7) 포장규격화 및 브랜드화가 촉진되는 등 유통구조도 선진국형으로 점차 변모

- 품질인증 농산물 : ('92) 21개품목, 4천톤 → ('96) 76개품목, 12만톤
- 쌀의 소포장 브랜드 유통비율 : ('90) 20 → ('95) 80%
- 공영도매시장 상장경매제도 등 공정거래질서가 점차 정착되어가고 있음
 - 농산물 상장경매율(금액기준, 가락시장) : ('90) 52 → ('96) 95%

(8) 연도별·계절별 농산물 수급이 과거에 비해 크게 안정되고 가공 농산물의 판매·수출도 증가

- 신선채소는 기술혁신·시설 현대화를 통해 연중공급 체계가 정착됨으로써 탈계절화 실현
- 농산물의 가공이 활성화되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식품을 공급하고 성출하기의 농산물 가격안정에도 기여
- 쌀의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로 유통마진도 대폭 축소됨
 - 쌀 유통마진율(원/80kg) : ('93) 14.2 → ('96) 9.5%

(9) 농어촌 생활환경과 복지수준도 크게 개선

○ 농어촌 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및 초등학교 급식 전면실시('97년)
- 실업계 고교생(1ha미만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 농어촌출신 고교생의 대학 특례입학 실시 : ('96~'97) 23,996명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97년 208억원)
- 농촌출신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지원(2004년까지 8개소)

○ 농업인에 대한 연금제도 실시 및 의료서비스 개선

-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 실시('95.7)
 - 전체 농업인의 95%가입 : ('96.12) 1,175천명
 - 월 2,200원씩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정액 지원
-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과 의료비 부담경감 추진
 - 보건소등 공공의료기관 진료시설·장비지원 (연간 700~800억원)
 - 지역의 중심병원에 대한 시설·장비보강(연간 300~400억원)
 - 고액진료비, 노인의료비 등을 직장조합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업규모를 늘리고, 농어촌의료조합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업인 의료비 부담경감 도모('96 : 1,371억원 지원효과)
 - 40세이상 농촌주민에 대한 무료 건강진단 실시('95부터)

○ 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 농촌지역 생활여건의 개선

- '96까지 지방상수도 56개소, 암반지하수 1,151개소를 개발
- 주택개량 : ('91~'93) 32천동 4,011 → ('94~'96) 66천동 10,400억원
- 마을정비 : ('91~'93) 304개마을 273 → ('94~'96) 553개마을 966억원
- 농어촌도로 : ('91~'93) 1,400km 2,900 → ('94~'96) 3,469km 9,336억원

산업별 주요성과

< 쌀산업 >

- 규모화에 의한 구조개선이 가속화되어 생산비가 절감되고 있음.
 - 3ha이상 쌀 농가수 : 9.3 → 33.6천호
 - 10a당 생산비는 '90~'96년에 연평균 3.4% 감소
- 쌀 생산의 주요 거점에 미곡종합처리장, 농업회사법인, 전업농체제가 구축되어 소규모 자경방식이 대규모 위탁경영방식으로 바뀌고 있음
 - 특히,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이 결합된 효율적인 대규모 경영체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쌀 매매업과 도정업에 대한 규제완화, 쌀 가격의 계절진폭 확대 등으로 민간유통이 활성화되고 경쟁체제가 구축되어 유통마진도 감소
 - 계절진폭('93-'96) : 3.2% → 14.1%
 - 총유통마진을('93-'96) : 14.2% → 9.5%
- 정부가 시장원리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수매방출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수매가격과 방출가격이 시장가격에 접근하고 양곡관리재정의 적자가 대폭 줄어들음
- '93년이후 수매가격이 동결내지 소폭 인상되었으나, 계절진폭 확대에 따른 산지가격 상승으로 쌀 농가의 소득이 증대함
- 단수가 500kg/10a 이상인 양질 다수성 장려품종의 보급률은 '93년까지 10%내외 수준이었으나, '96년에는 40%에 이룸

< 축산업 >

- 축산업은 농업부문에서 경영규모화가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
 - 전업축산 농가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의 사육두수 비중도 빠르게 증가

< 축산업 규모화 추세 >

	'90	'96
- 돼지 사육농가수 (천호)	133	33
· 전업양돈 농가 (1,000두 이상)의 비중 (%)	0.2	3.9
· 전업양돈 농가 사육두수 비중 (%)	23.3	42.7
- 닭 사육농가수 (천호)	161	187
· 전업양계 농가 (1만수 이상)의 비중 (%)	1.4	1.5
· 전업양계 농가 사육두수 비중 (%)	68.9	87.3

- 양돈, 양계업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이 빠르게 진행
 - '90~'95년간 비육돈 및 육계의 노동생산성은 연간 9.7%와 14.8%씩 증가
- 축산물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안정화 추세를 나타내어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짐
- 계열화된 기업농 또는 영농조합법인 위주로 공동브랜드에 의한 유통이 확대되고, 위생적 상품 생산 및 유통으로 소비자 만족도와 품질 경쟁력이 제고됨
- '96년 돼지고기 수출은 '95대비 2배 이상이 되는 등 수출산업으로 정착

< 시설원예산업 >

- 시설채소 및 화훼의 생산량 확대와 연중공급에 의해 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국제경쟁력도 강화되고 있음.
- 유리온실 재배 채소의 경우 비닐온실에 비해 당도 등 품질이 양호하며 상대적으로 균질하여 높은 가격을 받고 있음.
 - 화훼의 경우 광택과 선도가 상대적으로 좋아 고품질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일본으로의 수출이 증대되고 있음.
- 생산기술면에서는 자동화온실의 확대에 의해 과거의 비닐 온실에서 볼수 없었던 컴퓨터 및 센서에 의한 환경제어장치와 수경재배, 양액재배가 크게 증가하는 등 선진농업국의 재배기술 수준에 접근하는 농가가 늘어남
 - '90년대에 들어와 시설채소의 단수가 노지채소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짐
- 시설원예작물의 토지 및 노동생산성은 '90년대 연평균 10% 내외의 증가율을 보임.

< 과수산업 >

- '90년 이후 1ha 이상의 농가비중이 증가하는 등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음.
 - 특히 포도와 감귤의 1ha이상 농가비중이 사과나 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1ha 이상 과수농가의 비율변화 ('90-'95) >

- 사과 : 14.3% → 17.1%, 배 : 14.6% → 14.9%
 - 포도 : 2.2% → 5.5%, 감귤 : 23.8% → 28.9%
- 생산기반정비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산지유통시설 확충에 따른 품질 개선으로 농가 판매가격은 '90년 이후 계속 상승추세에 있음.

3. 보완과제

(1) 규모화·전문화된 새로운 농업경영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 경영체별로 기술·경영 수준에서 차이가 크고, 농가 스스로 경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지원체도가 미흡

- ⇒
- 경영발전단계에 따른 목표관리방식의 지원체계 확립
 - 기술·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 자금 지원제도 개선

(2) 품질인증품목의 확대, 포장규격출하 및 브랜드화의 진전 등 고품질 농산물 공급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농산물의 공급체계 구축이 미흡

- ⇒
- 식품소비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생산·유통정책의 추진
 - 농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안전성제고를 위한 시책을 강화
 -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로 소비자 선택기회를 확대

(3) 기술·시설기반 등 농업인프라가 꾸준히 확충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달, 특히 정보화는 이제 시작단계임

- ⇒
- 농업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전문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 개발·보급기능을 강화
 - 농업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농업인에 대한 정보통신 이용교육을 강화
 - 농업용수 개발로 농촌 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흙수로 등 영농구조물을 현대화
 - 대구획경지정리·기계화경작로 등 기계화 영농기반을 확충하고, 시설채소 등 고소득 성장작목의 생산기반 개선을 위해 받기반정비 사업을 활성화

(4) 농산물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체계가 미흡하며, 선별·포장등 품질관리와 수출물류체계도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음

- ⇒
- 기술·자본집약형 수출전략품목을 중심으로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유통체계 구축
 - 선별·포장·운송 등 수출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수출농업인에 대한 기술·경영지원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출지원 방안을 강구

(5) 산지와 소비지에 새로운 현대식 유통시설이 확충되고 공정거래 질서도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규격상품의 대량 출하체계가 미흡하고 물류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
- 산지 농협을 중심으로 규격품의 대량출하체계를 확립
 -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의 촉진으로 물류비를 절감
 - 도매시장, 물류센타 등 다양한 유통경로 육성으로 유통경로간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단계를 축소

(6) 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유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 추진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농약과 비료를 많이 쓰는 증산위주의 농법이 지속

- ⇒
- 환경농업법 제정 등 환경농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체계 확립
 - 농약·비료 사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보급
 - 축산분뇨의 자원화 촉진으로 축산공해 완전 제거

(7) 농업인연금제, 대학특례입학제 실시 등으로 농업인 복지여건이 크게 향상되고 농어촌정비법의 제정 등으로 생활환경도 개선되고 있으나, 선진국이나 도시지역에 비해 아직 차이가 큼

- ⇒ • 농촌지역의 교육·연금·의료지원시책을 강화하고, 농업인과 농촌에 대한 복지정책을 구분·추진하는 등 체계를 재정립
- 농촌도로, 주택, 생활용수, 하수도, 폐기물처리 등 생활환경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확충

(8) 앞으로 WTO 후속협상 등에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요구가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전망

- ⇒ • WTO 후속협상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협상 노력을 강화
- 식량안보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제적 지지확산 노력을 지속 추진
- 공세적인 통상외교 강화로 우리 농업의 수출산업화 촉진

(9) 효율적인 구조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법령·제도·조직을 재정비하고 투융자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

- ⇒ •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여 21세기 농정여건에 맞는 정책방향 설정
- 농업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산하관서의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
- 정부투자기관과 생산자단체의 기능혁신을 통한 경영합리화 촉진
- 정부는 생산기반 등 농업인프라에 집중투자하고 개별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장기저리융자로 전환하는 등 투융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10) 산업별로 규모화가 촉진되고 생산비가 절감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산업별 특성에 맞는 구조개선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필요

산업별 보완과제

< 쌀산업 >

- 저렴한 가격과 품질의 고급화로 소비자가 우리 쌀을 선호하도록 추진
 - 낮은 가격에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고 단보당 생산비를 절감
- 2004년 쌀 재협상 이전에 기본적인 생산·유통구조개선을 완료할 필요
 - ⇒ • 쌀 전문경영체 6만호를 적극 육성하고 경영체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 우량농지보전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고 규모화 시책을 강화
 - 미곡종합처리장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생산·유통체계를 확립

< 한우산업 >

- 2001년 수입개방시 경쟁가능한 예상가격(200만원/500kg, 2등급 기준) 수준에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규모화·품질차별화를 적극 추진
 - ⇒ • 한우 전업농(1만호 목표)을 중심으로 조사료기반·일관사육·고급육 생산·브랜드화 등을 종합 연계지원
 - 송아지가격안정제 실시('98.7)로 번식기반 유지
 -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고급브랜드육 생산·유통체계 확립

< 양돈산업 >

-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규격돈 생산을 촉진하여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 ⇒ • 전문경영체 육성(3천호) 및 계열화 확대로 생산비 절감
 - 품질개선단지 활성화로 수출규격돈 생산 확대
 - 전문종돈업체 육성으로 우량종돈 및 모돈 공급체계 확립

< 시설채소·화훼 >

- 시설현대화 및 기술·경영능력의 제고로 기술·자본집약형 수출산업으로 육성
 - ⇒ •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생산시설의 현대화·자동화지원 강화
 - 현대화된 시설에 맞는 기술·경영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기능을 강화
 - 종자의 국산화, 새로운 생산기술개발, 기자재산업 육성 등 기반강화
 - 포장센타를 중심으로 규격화된 고품질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구축

< 과수산업 >

- 수입 과일에 비해 특색있는 상품을 생산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과원 구조개선과 규모화를 촉진하여 경쟁력을 확보
 - ⇒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력형 과원으로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왜성화 등 수종갱신과 기계화 본격 추진
 - 받기반정비와 노동절약형 기술개발 등 생산기반 확충
 - 생산자조직 중심의 출하체계 구축으로 지역별 브랜드화 추진

< 2단계 농촌발전계획의 수립추진 >

- 그동안의 농정개혁 성과를 토대로 「'99년 이후의 2단계 농촌발전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음
 - 농림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기초로 선진농업 건설을 위한 핵심 시책을 반영
- 시·군별로도 농어촌발전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97.9월중)하고, 이를 토대로 2단계 시·군 농촌발전계획 방향을 정립
 - 시군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2단계 계획 방향 등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
- '97.10월중 시달될 예정인 중앙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시·군별 2단계 농촌발전계획 수립에 착수, '98.6까지 계획수립 완료

II. 21세기 농업정책방향

1. 21세기초의 농정여건

국제적 여건

- 개방화의 진전으로 무한경쟁 시대가 가속화되고 거의 전품목에 걸쳐 실질적 경쟁이 임박
 - 쌀, 쇠고기를 제외한 전품목이 개방됨(2004 쌀재협상, 2001쇠고기개방)
 - 향후 무역협상에서는 고율관세에 의한 보호체제, 국영무역 등의 보호장벽 완화가 집중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되며,
 - 검역 등 비관세조치도 국제수준으로 표준화 해가는 경향이 뚜렷
 - 경제성장과 고소득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도 장기적으로 어려운 상황 전개
 - 보조감축, 관세인하 등 추가적 개방의무 발생
 -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 유통업체에 의한 외국 농산물 판매가 용이
- 일본, 한국, 대만, 홍콩에 이은 중국, 아세안 국가의 성장 등 아시아권의 경제력 향상에 따른 새로운 농산물 무역질서의 대두
 -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권 국가에 대한 선진국들의 무차별적 시장개방 요구 증대가 예상되며 농산물 시장개방도 그 주요대상임
 - 아시아권 내에서도 우리 시장이 주요한 수출목표로 등장하여 주변국으로부터 경제력에 걸맞는 개방 요구가 증대될 전망
- 세계곡물시장 불안정성이 계속되는 한편, 국가적 차원의 식량안보 욕구는 더욱 강화될 전망
 -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공업위주 성장전략 및 소비증가로 곡물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 예상
 - WTO체제이후 농업보호의 퇴조는 세계적으로 식량공급 감축으로 작용
 - EU는 농업정책개혁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전통적 수출국들도 생산력을 늘려나가기 어려운 상황

국내적 여건

□ 선진국형 경제의 성숙으로 GDP성장률과 물가의 안정화가 예상된다.

- 전체 GDP 및 개인소득은 경제의 성숙단계의 진입에 따라 성장률이 다소 하락하는 가운데 지속적 성장을 실현
- 물가의 구조적 안정기조가 유지되고, 교역규모도 꾸준히 증대

□ 농산물 소비구조의 고도화, 유통시장 개방, 신유통체제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 중심적인 유통구조로 전환

- 고소득 시대에 따른 농산물 소비의 다양화로 제품 차별화가 가속화 되고, 외식산업의 대폭성장 예상
- 다양한 소비자 욕구에 적응하지 못하는 품목은 생산위축 불가피
- 유통경로 전문화·다양화가 진행되면서 할인점, 전문점 등 대형소매 기구의 시장 지배력이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산지유통과 도매유통에서의 빠른 변화 예상

□ 싸고, 품질 좋고, 인정받는 농산물 이외에는 개방시장에서 경쟁 불가능

- 거의 모든 품목이 개방시장에서 실질적 경쟁 상태에 놓이게 됨.
- 수입농산물과 품질차별성을 높혀 나가면서 비용절감·생산성향상을 실현하지 못하면 시장잠식이 불가피

□ 선진국가 진입을 위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증대 될 전망

-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안전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환경농업은 세계적 추세
- 농업이 원천적으로 맡고 있는 식량안보, 국토·환경보전, 토지비축 등 국가적 차원의 역할 뿐 아니라 농촌사회유지, 도시집중억제, 농업 고용, 노령인구부양 등 사회적 기능도 계속 증가

□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에 대비한 농정의 대응

- 구조적 식량부족 상태인 북한과의 통일에 현실적 대응 필요
- 기술·자재지원, 농업구조개혁등 단계적인 대책 마련

2. 21세기 농업정책방향

□ **농업** : 국제경쟁력을 갖춘 능률산업, 국토환경보전과 농촌 사회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공익산업

- 농업은 기술·자본·정보가 집약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며,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이 연계된 복합산업화가 진전

□ **농업인** : 기업가 정신과 전문적인 기술·경영능력을 보유한 건실한 전문경영체

- 2004년까지 12만명의 전문농업인이 육성되고 법인경영체와 함께 농업생산의 중심을 담당
- 일반 농업인들도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형태를 유지하면서 고소득 시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생산체계를 확립

□ **농촌** : 다양한 산업이 유치되고 자연과 문명이 조화된 지역사회

- 농심과 전통문화가 후세에 계승되며, 농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활력있는 지역사회로 육성

□ **경쟁력을 갖춘 전업농가 등 전문경영체 중심의 경영혁신으로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우리농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수준으로 육성**

- 농업생산시설기반과 함께 농업기술·정보기반 확충으로 2004년까지 선진국형 농업기반을 조성
- 전업농 등 농업인력 육성에 박차를 가하여 농업구조 개편 가속화
-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수출농업을 지향하고 기술·자본·정보 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고소득시대의 국민 수요에 부응한 소비자 지향적인 식품생산·유통체계 구축으로 우리농업과 농업관련 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실현
 -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특색있는 농업의 실천으로 풍요로운 국민 식생활을 보장하면서 농업의 꾸준한 성장을 추구
 - 식품소비시장 신장에 대응하여 농산물 유통·가공·판매를 연계한 고부가가치 복합산업으로 육성
 - 대형 소매점의 경쟁 등 소비지 유통변화와 전문경영체의 성장 등 산지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신유통체계의 구축

- 농업과 농촌이 선진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제고해 나가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
 - 쌀의 자급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선진국가로서 기반안정화에 기여
 - 늘어가는 환경욕구에 부응하고 안전 농산물 공급을 위한 환경농업 육성
 - 국토자원·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농촌개발 추진
 - 기초생활여건 및 농업인 복지증진시책의 지속추진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 새로운 농정여건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는 농정 조직 및 추진체계의 지속적인 재정비
 - 통일시대에 대비한 농정 및 국제협력 체계 강화
 - 농림행정 추진체계의 개편과 투융자 효율성 제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21세기 선진농업건설을 위한 핵심 과제를 선정, '99년이후의 2단계 농촌발전대책(안)을 확정

Ⅲ.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

1. 농촌투융자의 효율성 문제

대폭 증가된 농촌투자가 부실하게 집행되어 투자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구조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데, 과연 그런가?

□ 개방체제에 대응, 우리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그동안 농정시책, 주요제도, 농정추진체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도 대폭 확대하였음.

○ 그 결과 최근 농가소득이 늘어나고 수출이 증가하며, 생산기반도 정비되는 등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 가 소 득 : ('90) 11 → ('96) 23.3백만원 (2.1배 증)
- 농 가 저 축 : ('90) 420 → ('96) 1,570만원 (3.7배 증)
- 논 경지정리율 : ('90) 64 → ('96) 79%
- 벼농사 기계화율 : ('90) 78 → ('96) 97%
- 농산물 수출 : ('90) 1,405 → ('96) 1,829백만불 (1.3배 증)

○ 쌀, 축산등 산업별로 농업구조개선이 촉진되고 있음.

(쌀산업)

- 규모화된 농가가 증가하는 등 구조개선이 가속화되고 있음.
 - 3ha이상 쌀 생산농가수 : ('90) 17.8 → ('96) 34.2천호 (약 2배 증)
- 미곡 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생산 및 유통이 결합된 효율적인 대규모 경영체제가 빠르게 확산되어 생산비 절감과 편농기반이 구축됨
- 양정개혁에 의한 쌀값 계절진폭의 확대 등으로 민간유통기능이 활성화되고 쌀의 포장, 브랜드화가 획기적으로 진전
- 이에 따라 농가소득이 증가되고 소비자도 다양한 소포장 쌀을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음

(축산업)

- 규모화된 전업농과 계열화 등에 대한 경영규모의 확대가 크게 진전
 - 돼지 500두이상 사육농가 : ('90) 1,328 → ('95) 3,463호(2.6배 증)
- 양돈·양계업을 중심으로 시설현대화 등에 의한 생산성향상과 생산비 절감이 빠르게 진행되고 돼지고기는 수출산업으로 정착
- 계열화된 기업농과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브랜드 유통이 확대되어 소비자가 고품질의 다양한 육류를 선택·소비할 수 있게 되었음

(시설원예)

- 자동화온실 등의 확대로 연중 생산이 이루어지고 생산성이 크게 향상
- 고품질 채소·화훼의 생산과 수출이 점차 증대
- 무엇보다도 개방화가 되었음에도 개방 이전보다 농업성장율이 높아진 것은 농업인과 정부가 구조개선에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보아야 함.
 - 농업성장율 : ('85~'90) 연 0.24 → ('90~'95) 연 1.12%

□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추진되고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으나 농촌 투융자 재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실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시·군 농발심의회 등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거나
- 과육 또는 경영미숙으로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 사후관리가 부실하며 설치된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 등이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음

□ 투융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96년 이후 2차례에 걸친 전면적인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160개의 보완과제를 마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하여 농업인의 사업선택의 폭을 확대
 - 정부지원 대상사업 : ('95) 275 → ('96) 148 → ('97) 134개사업
- 정부보조는 기반시설, 기술, 정보 등 인프라 구축에 한정하고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융자로 전환토록 추진
- 사업대상자가 제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심사·평가기능을 강화
 - 3천만원이상 사업은 농·축협이 사업성 검토 및 신용조사 실시
- 정책자금 보다 자부담을 우선집행토록 지원방식을 개선
- 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해 목표관리방식(벤치마킹제)을 도입하는 등 경영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

□ 지난해와 금년에 농정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지도·감사를 실시

- 위법·부당사례 1,026건을 시정·주의 조치하고 부당 사용금액 1,346백만원을 회수 조치

□ 금년에도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농촌경제연구원, 삼성, LG경제연구소 등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공동평가를 실시중임('97.4~12)

□ 집행상의 일부 문제를 확대하여 마치 전체 농촌투자가 부실한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다수 성실한 농업인의 경영 혁신 노력과 성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

- 객관적인 성과는 사실대로 인정해야 하며, 만약에 그동안의 투자가 전혀 성과가 없었다면 추가 투자의 필요성도 설력이 없으며 농업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게 됨

□ 참고로 KDI 연구보고서 『농어촌투융자 효율성 제고방안』은

- 투융자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목표량의 적정성, 지원방식의 개선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은 대부분이 농림부의 1.2차 중간평가에서 이미 제기되어 개선대책을 추진중인 사항이며, 농촌투자가 실패했다는 내용은 없음
- ※ 지적사항 118건중 113건은 개선조치했거나(33건) 개선중이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영농규모 적정화사업의 금리인상 여부등 5건임

- 현행 농림사업 추진체계는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을 토대로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실시하는 상향식 자율농정 방식임
 - 사업대상자는 농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지도소 등 관련기관의 경영상담과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공개적인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이기는 하나 부적격자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사업이 부실화되는 것은 현장에서의 경영상담, 사전 심사, 사후관리 등이 소홀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임
-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에 대한 충실한 경영상담, 심도있는 사업타당성 검토, 객관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사업 대상자 선정, 자금집행 및 설치된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임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농업투자는 타 산업에 대한 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농촌투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과연 타당한 논리인가?

□ 투자효율성을 기준으로 농업투자의 확대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대에 맞지 않는 것임.

- 농업은 산업적 특성상 투자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70~80년대에 투자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에 계속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일부에서 제기된 적도 있었으나,
- UR협상을 거치면서 우리 농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식량 안보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농업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 되었음.
- 이에 따라 42조원 투자계획과 15조원 농특세 신설 등이 이루어져 농업과 농촌에 대해 본격적인 투자를 하게 된 것임.
- 이러한 투자확대는 수입개방으로 피해를 입게되는 농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농업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

□ 우리나라에서 농촌투자가 본격화 된 것은 WTO출범 이후로, 그 기간이 이제 겨우 4~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농촌투자를 계속해야 함.

- 그동안의 농촌투자 확대로 농가소득이 증가하고 소비자도 연중 다양하고 품질좋은 신선농산물 등을 싼가격에 소비할 수 있게 되는 등 구조개선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음.

- 따라서 그동안의 1단계 42조원 투자성과를 바탕으로 42조원 투자가 마무리되는 99년 이후의 2단계 농촌발전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적정규모의 농촌투자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이와 함께 투자우선 순위와 지원조건 등을 조정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음.
 - 정부는 생산기반, 정보, 기술개발 등 농업인프라에 집중투자
 - 개별 농업인에 대한 보조는 단계적으로 장기저리융자 지원으로 전환
 - 농업인은 새로운 경영·기술을 도입하는 등 자율적인 경영혁신에 주력

□ 참고로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이 왜 농업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함.

- 선진국 건설을 위해서는 농업발전이 필수적이며, OECD에 가입한 모든 선진국가는 농업에 막대한 투자를 해 왔음
 - 선진국은 수십년 동안의 농업투자로 70년대에 기반투자와 구조 개선을 완료하고 현재는 직접지불제와 농촌개발등으로 이를 보완
 - 일본의 경우('94) 농업의 비중은 1.9%이나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3%로 아직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쿠즈네츠교수는 “농촌개발이 안되면 중진국까지의 공업화는 가능하나 선진국은 될 수 없다”고 지적
-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식량안보, 국토환경보전, 지역균형발전, 전통문화의 보전등 많은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야 함
 - ※ 논의 공익적 기능은 13조 4천억원, 산림은 24조 6천억원으로 추정

2. 추곡수매 및 적정 식량자급율의 유지

WTO체제 출범 이후 추곡수매가를 두번이나 동결하는 등 쌀 농가의 소득 보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과연 그런가?

□ WTO체제 출범 이후 쌀 농가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음.

- 과거에는 전체 쌀 생산량중 정부가 수매하는 20~25%의 쌀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으나
 - 정부주도의 쌀 유통으로 산지 쌀값이 낮아 나머지 75~80%의 쌀은 수매가 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밖에 없었음.
- '93년부터 WTO협정에 따른 보조금감축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미곡종합처리장 등 산지유통기구를 육성하면서 수확기와 이듬해 7~8월간의 산지 쌀값의 계절진폭을 허용하고 양곡의 판매를 대폭 자유화 하는 등 쌀의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해 왔으며,
 - 산지 쌀값 또한 크게 상승하여 정부수매물량의 2배가 넘는 시중 출하물량이 높은 가격을 받게되어 농가의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음.

※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쌀 판매 조수입은 93년 6조 6천억원에서 96년에는 9조 1천억원으로 38%가 증가하였음.

□ 최근 규모화된 쌀 전업농이 증가하고 미곡종합처리장 등을 통한 생산·유통의 계열화와 브랜드 판매가 늘어나면서 수매가 보다도 높은 가격을 받는 고품질의 쌀이 많아지는 등 쌀 산업이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즉, 새로운 기술과 경영으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농가는 일반농가에 비해 높은 가격을 받는등 산지 쌀값도 품질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음.

- 따라서 정부 수매가는 이제 더 이상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최고가격이 아니며, 중급이하의 쌀에 대한 정부의 보장가격 역할에 머물게 되었음.

□ 앞으로 쌀 농가의 소득보장은

- 규모화와 기계화 등 경영혁신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 특색있는 고품질의 쌀 생산으로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성되어야 함.

□ 또한 쌀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와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도를 점차 확대하면서

- 환경보전지역·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 쌀을 지키기 위해 수매가격을 올리자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쌀을 포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 쌀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품질고급화와 함께 전반적으로 가격도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함
 - 국제가격보다 너무 비싸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쌀은 설 자리가 없게됨
- 일본의 경우 지난 '85년이래 매년 수매가를 동결 또는 인하 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96년산 수매가는 '85년에 비해 약 13%가 인하되었음
 - 대만의 경우도 '89년 1.1%인상한 것을 제외하고는 '86년 이후 계속 수매가를 동결
- 우리나라는 지난해 쌀 생산의욕 고취 등을 위해 수매가를 4% 인상 하였으나, 이러한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앞으로 수매가를 계속 올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식용쌀 수입, 식량 자급율의 하락등 정부의 식량자급 의지가 의심스러운데 대책은 무엇인가?

□ 수출을 통해 성장한 우리의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우리시장만 문을 닫고 있을 수는 없으며, 쌀 MMA물량 수입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 필요

- UR협상시 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2004년 까지 국내 소비량의 1~4%만 수입키로 결정
- 지난해에는 국내 쌀 수급이 어려워 중·단립종 쌀을 수입하였으나, 풍년농사로 수급여건이 호전되어 모두 가공용으로 공급중
 - 장립종 쌀이 가공용으로도 일부 적합하지 않아 가공업체의 요청에 따라 금년에는 중·단립종과 장립종을 병행 수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입쌀의 검역과 관리에 더욱 철저

□ 우리나라의 인구나 좁은 국토면적을 고려할 때 모든 곡물을 자급 하는 것은 불가능함.

- 우리나라 농지면적은 약 195만ha이나 식량자급을 위해서는 현재의 약 3배인 560만ha의 농지가 필요함.
- 특히 최근 축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사료용 곡물의 수요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가축사육 마리수 : ('85) 57,597 → ('96) 92,742천마리 (60% 증)
(소·젓소·돼지·닭)
 - 사료용 곡물수요 : ('85) 4,746 → ('96) 10,103천톤 (113% 증)
- 국토 면적상 사료곡물의 자급은 불가능하며, 조사료 생산확대로 대처가 가능하나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의 문제임
 - 곡물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축산을 포기하고 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 곡물자급도는 약 27%이며,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자급율은 53%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쌀의 경우 MMA를 제외하고는 자급을 유지하고 있음
- 보리의 경우 사료용과 맥주보리 등 가공용을 제외한 식용은 자급을 유지
- 밀과 옥수수는 국내외 여건상 거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 콩의 경우 식용의 약 37%를 자급, 감자·고구마 등 서류는 자급을 유지

□ 앞으로도 쌀과 식용보리(가공용 제외)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MMA를 제외하고는 자급을 유지해 나가고,

- 식용콩과 서류의 경우도 현재의 자급율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
- 밀·옥수수 등은 수입선다변화 등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흉작 등 유사시에 대비

□ 특히 쌀 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자급기반 확충을 위한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

-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하여 우량농지 보전기능을 강화(농지법 시행령개정)
 - 2004년 논면적 110만ha, 벼 재배면적 92만ha 확보
- 단수증대를 위해 고품질 다수확 품종개발을 확대하고 토양개량 사업을 전액 국고보조로 추진
 - 우량품종 육성 : ('96) 26 → ('97) 32 → (2001) 40개
- 쌀 전업농 6만호를 육성하고 RPC의 생산·유통계열화 사업을 확대하는등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시책을 본격 추진
 - 2004년까지 미곡종합처리장 40개소를 쌀 주산지에 설치
 - 미곡종합처리장과 인근 작목반 등과의 계약재배로 품종을 단일화 하여 고유브랜드화를 유도하고 가격차등화로 양질미 생산 촉진
- 약정수매제, 규모화 촉진 직불제 실시로 쌀 농가의 소득을 보완

값싼 외국쌀을 사다가 먹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데 구태여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쌀 자급을 위해 애쓸 필요가 있는가?

□ 현행의 쌀 소비추세를 감안할 경우 2004년 벼 재배면적 92만ha, 10a당 단수 480kg 달성시 쌀 자급이 가능(MMA 4% 제외)

- 벼 재배면적 : ('96) 105 → (2004 p) 92만ha (논면적 110만ha)
- 10a당 단수 : ('95) 445 → ('96) 507 → (2004 p) 480kg

□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은 모두 주곡만큼은 자급을 유지

- 농업발전과 주곡의 자급은 주권국가의 기틀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임.

□ 우리가 쌀이 부족할 때 필요한 양을 필요한 시기에 적정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안보상 취약 해지므로 쌀 자급이 필요

- 세계 쌀 생산량(360백만톤)중 중단립종 교역량은 2~3백만톤 수준에 불과하며, 쌀 수출국도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음
 - '93년 일본이 냉해로 쌀을 수입할 때 국제 쌀값이 71%가 상승하는 등 국제 쌀시장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 중국의 쌀 수입국으로의 전환가능성, 정부보조 삭감, 물·환경문제로 인한 수출국의 생산확대 한계등 불안요인이 많음

- WTO이후 농업보호의 축소는 세계적으로 식량공급 감축으로 작용

※ 미국 월드워치 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 소장은 앞으로 “식량안보가 군사안보보다 우선” 하는 사태가 올 것으로 예언

□ 우리의 여건상 모든 식량의 자급은 불가능하나, 21세기 선진국 건설을 위해 주곡인 쌀은 자급을 유지하여 식량주권을 확립해야 함.

-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

3. 농지보전 및 이용

농지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농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에 애로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농지규제가 너무 풀려 무분별한 농지잠식이 이루어짐으로써 쌀 자급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농지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 농지규제와 농지가격은 각자의 위치에 따라 입장이 다른 것이 현실임

- 농사를 계속 지으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농지에 대한 전용규제를 강화하고 농지가격이 낮은 것을 희망
- 땅을 팔고 이농하려는 농가는 농지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농가자산 가치면에서 농지가격이 높아지기를 희망
- 주택, 공장 등을 지을 사람은 값이 싼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규제 완화를 희망

□ 따라서 농지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추진

- 쌀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농업진흥지역등 우량농지 보전기능 강화
 - 우량농지전용시 농지조성비 외에 경지정리비, 용수개발비등 추가부과
 - 준 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업등 농지전용 허용면적 축소
 - 지자체에 전면 위임된 농지전용허가권한의 농림부 이관
- 주택, 공장등 새로운 토지수요는 가급적 산지를 활용토록 유도
 - 산지를 70%이상 활용하여 주택, 공장등 건립시 각종 부담금 면제
 - 도로변 1km내 준보전임지에 대한 전용제한을 철폐
 - 산업단지(수도권제외) 조성시 각종 부담금 면제

□ 앞으로 쌀 자급을 위한 논면적(2004년 110만ha)은 꼭 지켜나가도록 최대한 노력

4. 농가부채

'92년 9조원이던 농가부채가 '96년에는 28조원으로 증가되는 등 농가 경제가 악화되었으므로, 농가부채 경감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농가부채를 축소 발표하였다는 주장도 있는데, 실상은?

□ 개방된 시장경제의 경쟁속에서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서는 성실한 책임경영이 필수적이며,

- 신용사회에서 부채를 경감해 주는 것은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것임

□ 실제적으로도 약 19%의 농가는 부채가 전혀 없으며,

- 이런 농가들은 성실한 농업경영과 근검·절약하는 생활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 부채가 없는 농가의 대부분(67%)은 1정보미만의 영세한 농가들이며, 전체농가의 62%는 저축이 부채보다 많음
- 부채가 많은 농가는 대부분 규모가 큰 농가로 이는 기업경영의 차원에서 이해 해야함
- 장기저리의 유리한 정책자금을 지원받고도 농업경영을 성실히 하지 못하여 발생한 부채를 경감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며 성실한 대다수 농가와 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음.

□ WTO출범 이후 건국 이래 최대의 자금을 농업인에게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해 왔음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일 일부 주장처럼 농가부채만 증가했다면 더 이상의 농촌투자는 필요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됨

-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농가는 성실히 농업경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는 정부의 정책자금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 자본만 가지고도 사업을 영위하여 성공한 농가도 많이 볼 수 있음.

□ 농가부채는 규모보다 상환능력이 중요하며, 부채를 얻어 시작한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음

- 우리나라 농가호당 평균 부채는 '96년 1,173만원으로 부채중 78%가 농지·농기계구입 등 생산성부채임.
- 농가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채권, 주식, 예·저금 등 유통자산에 대비한 부채비율도 '96년에는 55.4%로 나타나 농가의 대부분은 충분한 부채상환능력을 가지고 있음 ('96 농가 호당평균 유통자산 : 2,118만원)
 - 또한, '80년대에는 부채가 저축보다 많았으나, '91년부터 저축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음. ('96년 농가호당 평균 부채는 1,173만원이나 호당평균 저축은 1,570만원임)
- 농가에 공급되는 자금들의 대출조건들도 대부분 연리 5%의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음
- 요즈음의 농가부채 증가는 '80년대 이전과 같이 상환능력이 없는 고리채에 의한 소비성자금의 부채가 아니라 농업생산활동이 상업화 되고 기업화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
 - 농업경영이 기업화되면서 발생하는 이러한 부채는 동시에 농가자산의 증대로 나타나며,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여하는 것임.

□ 지난 5년간 농가 호당 평균부채액은 '92년말 568만원에서 '96년말 1,173만원으로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9조원에서 17조원으로 약 2배 증가하였으나, 일부에서 27조원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영농규모가 크고 농가소득이 큰 농가일수록, 그리고 축산·화훼·시설채소·특작 등의 농업을 하는 농가의 부채가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어 농가부채 증가가 농가경제를 악화시킨다고 보기 어려움
- 일부에서 주장하는 27조원은 농·축협이 조합원에 대출한 대출총액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비농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히 농가조합원의 대출금만을 산출하면 14조원으로 잘못된 통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참고> : 농·축협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 28조원과 농가부채중 농·축협 대출금 14조원의 차이('97.5~6월 150만 농가 전수조사 실시결과)

- 농·축협 조합원중 농가가 아닌 조합원(약 50만명)에 대한 대출금이 8조 6천억원이며,
- 농가 명의로 대출받아 친척 등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이 약 5조 6천억원으로,
- 이 둘을 합하면 14조 2천억원으로 양자 사이의 차이가 규명되었음

< 농가 호당평균 저축 및 부채의 변화추이 >

	'85	'90	'96
호당 평균저축	681천원	4,199	15,703
호당 평균부채	2,024천원	4,734	11,734
생산성부채 (구 성 비)	1,306천원 (64.5)	3,147 (66.5)	9,136 (77.9)
저축이 부채보다 많은 농가비율	33.1%	49.1	61.5
단기상환능력(부채/유통자산)	114.9%	72.5	55.4

5. 농가인구의 감소

6,195농가(90.1~97.4)가 귀농하였다고 하나 전체적으로는 20만호 이상 농가가 감소하여 “돌아오는 농어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잘못된 농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 국토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고 자원이나 농경지가 부족한 우리나라가 오늘날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은 적극적인 공업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임.
 - 수익성이 높은 분야로 사람·자원이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임.
 - 만일 공업화정책을 추진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이 과거와 같이 농업에 종사했었다면, 200만ha도 안되는 농경지를 1,000만이 넘는 가구가 경작하여
 - 호당평균 약 0.2ha(600평)의 농지에 온가족이 의존함으로써 도저히 현재와 같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임.
- 농가의 자녀중 일부만 농업에 종사하고 대다수는 2·3차 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농가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며
 - 이에 따라 농가당 영농규모가 늘어나고 기계화 등으로 생산성이 높아져 농촌과 도시의 생활수준이 모두 향상된 것임.
 - 이는 선진국도 동일하며 미국도 농가인구는 1.9%에 불과(한국 10.3%)
- 다만 농촌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 농사짓는 사람도 농촌에 살기가 어려워져 농촌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 농촌지역에 2·3차 산업을 육성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등 농촌인구의 감소방지에 적극 노력해 왔으며,
 - 그 결과, '90년대초 연평균 4.9%씩 감소하던 농촌인구가 '94년이후에는 연평균 1.9%로 감소하는등 감소추세가 최근 크게 둔화 되고 있음
- 또한 최근 농업구조개선으로 농업의 수익성이 높아짐에 따라 40세 이하의 청장년 층을 중심으로 귀농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 '90~'97.4월 사이에 6,195가구가 귀농하여 정착

6. 농업재해 지원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고 농작물 재해 보험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 자연재해 발생시 지원은 피해농가의 농지소유 규모와 피해정도에 따라 차기영농 활동과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농약대, 대파대, 이재민 장기구호, 생계지원, 수업료 감면, 영농자금 이자 감면등 실시
 - ※ 근거법 :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 재해농가 지원을 위해 그동안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의 현실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음
 - 영농규모가 큰 농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
 - '94년도 : 지원대상 농지 소유규모를 1ha미만에서 2ha미만 농가로 확대
 - '95년도 : 지원대상 피해율을 50%이상에서 30%이상 농가로 확대
 - '96년도 : 2ha이상 농지소유 30~50% 피해농가에게는 지원되지 않던 영농자금 이자감면 및 농조비 감면 대상을 경지 규모에 관계없이 30%이상 모든 피해농가로 확대

 -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상향조정
 - 금년 7월부터는 과수, 화훼, 버섯 등 지원기준을 무, 배추 대파대에서 실제 묘목대등으로 개선(사과 : 1,318 → 1,700천원등)

- 하우스·초지등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도 현실화

	<u>종 전</u>	<u>개 선</u>	
철재하우스	5,810	6,070원/m ²	(4.5%)
불경운초지	2,115,000	2,290,000원/ha	(8.3%)
육성돼지	75,000	78,000원/마리	(4.0%)
조상육잠실	14,300	14,800원/m ²	(3.5%)

□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전액 보상하는 농업재해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선진국의 경우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직접 보상해 주는 나라는 없으며, 보험 또는 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 '82~'91까지 수도작에 대해 재해보험도입 도상연습을 실시하였으나, 실시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중단
 - 보험료 50% 보조시에도 농업인 66%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특히 재해안전지대 농업인들은 보험가입을 기피)
- 재해보험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축산(소), 과수(사과)등에 대해 재해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 '97부터 가축(소)에 대해 공제시범사업 실시중(공제료 50%지원)
 - 과수는 농경연 용역결과 여건이 좋은 사과에 대하여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

7.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낮은데 비해 보험료 부담은 높은 문제가 있으며, 지역, 직장, 공·교 조합으로 나누어진 현행 의료보험 조합은 통합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 정부는 그동안 농어촌 의료비부담 경감 및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실시해 왔음

○ 의료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하여

- 노인 및 고액진료비에 대해서는 직장, 도시, 공·교, 농어촌 조합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부분통합의 효과를 거양
 - 농어촌조합 지원효과 : ('96) 656 → ('97계획) 830억원
- 국고지원 예산의 일정액을 농어촌조합 등 지역조합에 추가 배분하는 국고 차등 지원을 계속 확대해 오고 있음 : ('96) 615 → ('97계획) 786억원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 40세이상 농어촌 주민에 대한 건강진단을 2년마다 실시('95.7부터)
- 보건소등 의료장비·기자재 지원 : ('96) 419 → ('97.계획) 429억원
- 농촌지역의 중심 민간병원에 시설·기자재 지원(년간 400억원)
- 농어촌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확대 설치('97 : 50개소)

□ 의료보험조합 통합문제를 포함한 농어촌 의료비 부담 경감문제는

-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중임
 - 조합규모의 광역화를 통한 단계적 통합 방안 등을 모색

8. WTO 이행특별법 시행령 제정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업보호를 위해 제정한 WTO 이행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UR 타결이후 우리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피해예방을 위해 WTO 이행특별법을 제정·공포('95.1)
 - 주요 내용은 경제주권보장, 특별긴급관세, 농림수산 사업의 구조조정사업 실시 등임(총 14조)

- 정부는 이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법에서 「협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 사항은 관계법률과 시행령을 이미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이법에 의해 바로 시행령을 만들 사항은 관계 시행령을 제정해 나가고 있음
 - 경제주권의 보장, 민족내부 거래 등 별도 시행령이 없어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5개 조항)은 정부정책으로 추진
 - 보조금 조치, 특별긴급관세, 수입기관 지정 등 8개조항은 관세법·양곡관리법 등 56개의 관련법과 시행령을 이미 개정하여 소관부처별로 시행중에 있음
 - 특히, 생산자 보호를 위한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을 별도로 제정하고
 - 소요재원도 마련(310억원)하여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를 '9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 환경보전과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입은 현재 연구·조사를 실시중임('97예산 : 5억원)

- 앞으로도 이 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성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WTO 출범에 따른 국내 농업과 농가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음

WTO협정이행 특별법 후속조치내용

구 분	관 련 조 항	후속조치 내용
<input type="checkbox"/> 선언적 분야 <input type="checkbox"/> 이미 시행중인 분야 <input type="checkbox"/> 기타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조(목적), 제2조(경제주권의 보장), 제5조(민족내부 거래) ○ 제 4조(보조금에 대한 조치) ○ 제 6조(특별긴급관세) ○ 제 7조(농수산물 관세 및 이익금 용도) ○ 제10조(수입기관의 지정) ○ 제 8조(국민건강의 보호) ○ 제 9조(환경의 보호) ○ 제11조(국내 지원정책의 시행) ○ 제12조(생산자 단체의 수급 조절에 대한 지원) ○ 제 3조(협정상 권익확보) ○ 제13조(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사업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정책으로 추진 ○ 관세법 제13조에 반영 (상계관세 부과) ○ 관세법 제12조 제3항에 반영 (농·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 관세 부과) ○ 양곡관리법 제13조, 농안법 제10조, 축산법 제55조, 농·축산물 시장접근 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등에 반영 ○ 식품위생법 제4조~제6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1조, 제24조, 농약관리법 제5조, 식물방역법 제6조~제8조,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등에 반영 ○ 농발법 제4조, 제16조, 농안법 제47조, 수출보협법 제1조~제21조,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제46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농특회계법 제3조, 국민연금법 제10조 등에 반영 ○ 차기 협상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 매년 국회에 구조조정 사업 시행 결과 보고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WTO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직접지불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도의 지원조건을 완화할 용의는?

- WTO출범에 대응한 농가소득지원과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직접지불제의 확대를 적극 검토·추진하고 있음
 - 65세 이상의 농가가 쌀 전업농에게 소유농을 전부 이양하거나 5년이상 장기 임대시 ha당 258만원 지급하는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도를 '97년부터 시행중에 있음(97:12천ha, 310억원)
 - 이 이외에도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농업인 연금지원 등 연간 약 1조 5천억원 규모의 직접지불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하는 문제는 앞으로 재정여건과 농가지원 효과, 실시가능성, 구조조정 촉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우선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조건불리지역과 환경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도입여부, 실시방법 등을 강구해 나가겠음.
- 현행 규모화 촉진직접지불제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문제는
 - “3년이상 계속 영농한자”에 대하여만 지급하던 조건을 “3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1기작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자”로 완화를 추진중이며
 - 대상연령을 인하하거나 부분이양을 허용하는 등의 문제는 추후에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음.

여 백

< 제 2 편 >

산업별 경쟁력 제고대책방향

여 백

쌀 산 업

I. 쌀산업의 구조변화와 향후전망	59
II. 쌀산업 경쟁력제고대책 평가 및 성과	64
III. 경영사례 비교	69
IV. 주요 보완과제	71
V. 2단계 쌀산업 경쟁력제고대책 추진방향	72

여 백

I. 쌀 산업의 구조변화 및 향후 전망

1. 쌀산업의 구조변화

가. 경영의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경영체 등장

- 경영규모가 영세한 쌀 농가들이 채소, 축산 등 타품목으로 전환되고 있는 반면, 규모화된 쌀전문 생산농가수 증가
 - 쌀 생산농가수 : ('90) 1,506천호 → ('95) 1,203천호
 - 3ha이상 쌀농가 : ('90) 17.2천호 → ('95) 33.6천호
- 벼농사 전문법인형태의 새로운 경영체가 3,634개소가 설립되어 위탁영농, 대행영농 등 대규모 농작업이 가능
 - 영농조합 법인수 : ('91) 29개소 → ('91) 315 → ('95) 2,455
 - 농업회사 법인수 : ('91) 45개소 → ('93) 481 → ('95) 1,179
- 소규모 농가는 작목반, 농기계 공동이용 등으로 조직화 되고 RPC와 의 계열화 형태로 발전
 - ※ RPC와 생산농가의 계열화 진전 : ('96) 10개소 → ('97.P) 82개소

나. 대부분의 농작업이 기계화되고 있음

- 벼농사의 기계화율은 97%('96)에 이르고 있음
 - 트랙터, 콤바인 대수 : ('91) 107천대 → ('95) 172
 - 농작업 기계화율('96) : 경운·정지 98%, 이앙 97%, 수확 96%
- 기계화진전과 위탁영농체계가 구축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위탁영농이 증가함
 - 이앙위탁영농비율 : ('90) 58.4% → ('95) 62.5%
 - 수확위탁영농비율 : ('90) 63.6% → ('95) 78.3%

- 미곡종합처리장 산물수매 확대로 수확후 벼 관리비용이 절감
 - 벼를 산물로 관리할 경우 포대로 관리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30% 정도 저렴

< RPC 산물수매시 비용절감 >

구 분	포 대 수 매		RPC 산물수매	
	방 법	비용(원/80kg)	방 법	비용(원/80kg)
건 조	천일건조	9,098	복합건조	8,203
정 선	풍 구	925	없 음	-
계량·포장	인 력	925	없 음	-
포 장 재	P.P포대	797	없 음	-
운 반	경 운 기	1,111	산물차량	1,111
상 하 차	인 력	433	없 음	-
계	13,289		9,314	

- 벼농사의 규모화·기계화에 따라 단위면적당 직접생산비, 경영비는 '90년 비하여 오히려 줄어들음
 - 생 산 비 (10a) : ('90) 385,851원 → ('96) 312,900원
 - 직접생산비(10a당) : ('90) 175,895원 → ('96) 162,045원
 - ※ 생산비는 '90년가격으로 실질화

다. 쌀의 상품화·품질별 차별화가 크게 진전

- RPC에 의한 쌀의 규격화·상품화가 급속히 확대되고 소비자의 기호가 고급화, 다양화 됨으로서 품질에 따라 가격차가 크게 나타남
 - 규격포장 쌀의 거래가 전체 유통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96년도 100개소의 RPC에서 고유브랜드의 지역특산미로 판매
 - 계약재배를 통해 고품질 쌀을 매입, 품질인증을 받아 고가판매
 - 유기농법쌀, 흑미·향미등 특수쌀을 생산하여 일반미보다 2배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

라. 양질·다수성 품종 공급의 확대와 생산단수의 증대

- 단보당 500kg이상 고품질 다수성 품종의 재배면적 확대로 '90년대초 단수 정체현상을 벗어나 생산단수가 크게 증대
 - 단수능력 500kg이상의 품종 보급율 : ('93) 10%내외 → ('96) 40%

< 500kg/10a 이상 양질품종의 연도별 재배현황 >

연 도	'91	'92	'93	'94	'95	'96
재배면적(천ha) (비율, %)	58.1 (4.8)	89.7 (7.8)	134.2 (11.8)	283.7 (25.4)	314.0 (30.0)	417.0 (39.7)
수량능력(kg)	515.6	515.6	515.6	513.7	513.7	514.0

-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 사업확대 실시 및 주수확보등 재배방식 개선으로 단위당 생산성 증대 실현

- 쌀 생산구조는 아직 영세하고 노령화 되고 있으나, 규모화와 기계화에 따라 생산성이 개선되고 점차 능률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쌀시장과 유통·가격 구조가 크게 변화되고 있음
- 앞으로 국내적으로 시장기능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제적인 개방화가 확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쌀 산업의 발전방향은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2. 향후 쌀산업 전망

가. 대내적 여건

- 쌀농사 규모가 1ha미만인 영세농의 경우 앞으로도 축산·채소·특용작물 등으로의 작목전환 추세는 지속될 전망
 - 전체농가대비 벼재배 농가비율 : ('90) 85.2% → ('95) 80.2%
- 특히,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농가가 전체 쌀농가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은퇴에 따른 쌀 농사의 규모화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
 - 65세이상 쌀 재배농가 : ('90) 25% → ('95) 39%
- 산지 및 소비지의 유통여건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임
 - 산지의 경우 RPC를 중심으로 계열화등이 다양하게 이루어 짐으로써,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이 크게 감소
 - 소비지에서도 소득증가에 따라 백화점·슈퍼등 대형유통기구 중심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쌀의 선호경향이 뚜렷해 지고 있음

나. 대외적 여건

- 국제 쌀시장(중단립종)의 경우 교역량이 우리 쌀생산량의 1/2수준인 200~300만톤에 불과하여 새로운 수입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한 양상을 보임
 - 일본수입가격('93) : ('93.10) 354 → ('94.5) 606\$/톤(71%상승)
- 아울러 곡물생산에 대한 정부보조삭감·환경문제등 생산확대의 한계와, 수입수요 증가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국제 식량위기를 경고하는 비관론이 대두(레스터 브라운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를 중심으로 전세계는 시장개방과 통합이라는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으며, 2004년 WTO 차기 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APEC, OECD등에서 시장개방 확대 및 추가적인 보조금 감축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
- WTO협정 의무이행과 추가적 개방이 예상되는 차기 라운드에 대비하여 각국은 수매가등 지지가격을 인하하고 보조금을 감축해 오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시장가격지지 성격의 부족액 지불제도를 폐지하고, 규모를 축소하여 직접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
 - EU의 경우에도 정부가 지지해 주는 가격수준을 2000년대까지 20% 감축
 - 일본, 대만의 경우 UR협상이 시작되던 '86년부터 추곡수매가를 계속 동결 또는 인하함으로써 '95년 수매가는 '86년 대비 12.2%(일본) 낮은 수준

- WTO체제는 농업부문에 있어서 자유화 확대를 통한 무한경쟁이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로 식량안보의 논리가 WTO체제에서 인정되었지만 이러한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제적 교역자유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수출국들의 입장이고, 기초식량의 자급을 위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수입국의 입장과 계속 대립하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협상에서 우리 쌀을 계속 지켜나가야 하겠으나,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가격이 높아지지 않으면서도 품질을 고급화 함으로서 우리소비자들이 우리쌀을 찾도록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따라서 우리 쌀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값을 올리 지 않고서도 소득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규모를 늘리고 생산비를 줄이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함

Ⅱ. 쌀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평가 및 성과

1. 추진상황

< 1단계 대책 >

가. 양정제도의 개혁

- WTO체제 출범에 따라 추곡수매 보조금(AMS)을 매년 감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부수매는 년차적으로 줄여야 함
- 따라서 정부수매에 의한 수확기 가격지지는 한계가 있으며, 농가가 직접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는 정부수매량의 2배가 넘는 물량이 제값을 받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민간유통 활성화가 긴요하다는 판단하에 '93.8 양정개혁을 단행하였음
 - 양정개혁의 주요내용은 조곡공매제 실시, 계절진폭허용, 양곡매매업 신고제 전환, 소포장판매 자율화, RPC의 확대설치 및 매입자금 지원확대, 농협차액수매제 도입등임

	양정개혁이전('93)	양정개혁이후('96)
· 계절진폭	3.2%	14.1%
· 수확기 산지쌀값	101,474원/80kg	136,463
· 유통마진	14.2%	9.5%
· 쌀농가 조수입	63천억원	91천억원
· 양곡판매상	42,981개소	49,588개소
· RPC 매입	-	327만석
· 정부수매	1,000만석	862만석

나. 농업기계화를 급속히 추진

- 벼농사용 주요 농기계인 이앙기·트랙터·콤바인 대수는 '96년 458천 대로서 '90~'96기간중 연간 12.6%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으로 영농비가 경감되고, 기계공급의 증대로 적기 농기계 이용이 가능해짐

다. 쌀생산기반의 지속적 확충

- 경지정리, 용배수 개선등 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영농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
 - 경지정리율 : ('90) 64% - ('96) 79%(902천ha 목표대비)
 - 수리답비율 : ('90) 73% - ('95) 75%
- 우량 논 잠식억제를 위한 과수 및 시설원예등 받기반 정비사업 추진

라. 농지제도 개편

-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주체 육성, 신규영농주체의 육성 등을 위해 농지 소유규제를 완화
 - 농지거래규제의 완화, 농업진흥지역내 소유상한·철폐 등으로 농지 유동화를 촉진하여, 우수한 대규모 경영체 육성여건 마련
-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농지조성비를 차등화
 - 농지전용시 생산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부터 계획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기초 마련
- 영농의 목적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제도 도입등

마.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설치확대

- '92년부터 수확후 건조·저장·도정·포장 등을 일관 처리하는 RPC 확대 설치로 미질의 향상 및 인력절감 등에 크게 기여
 - RPC 설치 : ('97까지) 253개소 - (2004까지) 400개소
- 아울러 RPC에 대한 원료비 매입자금 지원 등으로 수확기 농가판로 확보에 큰 역할 수행
 - RPC 수확기 매입량 : ('96) 327만석 - ('97.P) 400만석

< 2단계 대책 : '96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 >

< 배 경 >

- '90년대 중반까지 쌀 재배면적이 연간 37천ha씩 급격히 감소
- 단수가 정체되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재고가 격감
- 산지 쌀값이 수매가격에 근접하게 되어 보다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수매제도 도입여건이 마련

가. 농지전용 억제 및 산지활용 촉진

- 준농림지역의 전용 허용면적을 대폭 축소
 -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허용면적 : 3만㎡이하 → 500㎡이하
- 농업진흥지역내 신고전용 요건강화
 - 축사, 농가주택, 마을회관등 농작물 재배와 직접관련이 되지 않는 시설의 설치는 신고전용에서 허가전용으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면 위임되었던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일부 농림부로 이관
 -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우 6만㎡이상, 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 2만㎡ 이상은 농림부장관이 허가
- 준보전임지 70%이상 활용시 산지전용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

나. 약정수매제 시행

- 종래 당년도 수확기에 가서야 수매가·수매량이 결정되던 방식을 바뀌어 연초에 미리 수매가·수매량을 예시하여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
- 생산농가와 약정체결을 통해 약정물량에 대한 하한가격을 보장하고 약정액의 40%를 선금으로 지급
- 약정농가는 수확기에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시중출하와 정부수매 중 유리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 '97 수매가는 '96.12.24 기결정 예시

다. 직접지불제 실시

- 은퇴를 희망하는 65세이상 고령농가가 농지매도 또는 5년이상 장기 임대시 소득지원하고, 전업농에게는 규모확대의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 실시

라. 단위수량 제고대책

- 단위당 500kg이상의 양질다수성 보급확대를 위해 홍보 및 재배법 지도를 강화
- 지력증진을 위한 논토양 개량사업을 확대 추진
 - 토양개량사업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토양개량 사업비를 전액 보조 지원하고,
 - 개별농가 구입·살포에서 농협 일괄구입 및 공동 살포로 전환
- 아울러 벼포기수 늘려심기, 피를 비롯한 잡초제거, 적기병충해 방제 등 알뜰영농 추진

2. 쌀산업대책의 성과

가. 민간시장기능이 활성화되어 수확기에 농가의 판로가 확대되고
농가가 생산한 쌀이 품질에 따라 제값을 받는 시장구조로 전환

- 품질만 좋으면 얼마든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형성
 - 일반 쌀 : 150,000~160,000원/80kg(시장출하가격 기준)
 - 품질인증쌀 : 190,000~200,000원/80kg
 - 흑미 : 480,000원/80kg
 - 다마금 : 240,000원/80kg
 - 오리농법재배쌀 : 270,000~280,000원/80kg
- 수확기때 생산농가의 판로걱정이 상당폭 해소
 - 정부, RPC, 농협, 공매업체, 임도정공장등 판로가 확대 다양화
 - 특히, RPC에 의한 산물수매 실시로 노동력·관리비용 절감은 물론 농가편의를 증대
 - 따라서, 정부수매는 과거 수확기 가격지지에 있어 주된 역할에서 민간유통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로 전환

나. 소비지 유통체계가 다양화되고 직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소포장, 규격화, Brand 상품출하확대 등으로 유통마진 축소
및 부정유통소지 해소등 새로운 유통질서가 확립

다. 농작업 기계화가 실현되고, 위탁영농이 보편화 됨으로서
벼농사 작업은 타작목과 비교할 때 편의성이 크게 개선

Ⅲ. 경영사례 비교

< 소규모 농가 >

- 소규모로 벼농사를 경영하는 농가를 모아서 대규모화함으로서, 인건비 등 생산비를 낮추고, 품종통일·공동방제등 생산을 효율화 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고성능 동력분무기등 대형농기계를 갖추고, 전문가들을 활용할 경우 10명미만의 인원으로 100ha이상 영농이 가능
 - 평균 1ha농지를 100명이 경영하는 것보다 낮은 생산비로 생산
 - 90명의 여유노동력은 특용작물 재배, 한우사육 또는 타산업 취업 등으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갈 경우 후생수준이 높아 질 것임

경기 안성 곡산 RPC사례

- 2개면에 21개 작목반(118호 농가)을 통해 210ha(1,140톤)에 대해 계약 재배 실시
 - 계약품종은 추청으로 통일
- 파종기, 이앙기, 수확기에 각마을 이장과 품종통일, 종자공급, 논갈이등 위탁작업, 공동수확, 매입가격 등을 협의
- RPC에서는 계약농가의 신청을 받아 추청종자를 이장들에게 공급하고, 육묘상자를 직접 구입·공급하고, 지역별로 3~4개 농가에서 육묘작업을 공동으로 수행
 - 수확기 직전에 톤백을 구입하여 보급하고, 산물 크레인 산물수송차량으로 RPC에 반입
- 이와같이 생산된 쌀은 경기고유미, 안성맞춤, 우리고향쌀로 브랜드화하여 출하

강원 철원농협 RPC

- 철원지역에 14개 작목반을 통해 328ha를 계약재배
 - 품종은 오대벼로 통일
- RPC에서는 생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 채종포(10ha)를 운영하여 종자를 공급
 - 유기농 작목반(25호)을 운영
 - 공동이앙, 시비, 수확, 수송을 지도하고
 - 영농지도교육 및 평가
- 아울러 산물수송차량, 지게차, 벼간이저장 컨테이너 등을 확보하여 수확기 산물상태의 매입확대

< 대규모 전업경영체 >

- 대규모 벼농가를 하고 있는 전업농의 경우에도 경영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기계화 일관작업 등을 통해 생산비를 낮추어 가야 할 것임
- 고품질·다수확 품종의 식부 및 알뜰영농을 통해 생산성 증대필요

충남 당진 신평면 매산리 박종환씨

- 당초 8천평이던 농사규모를 농지구입 12천평, 임차 15천평으로 경영규모를 35천명(11.7ha)으로 확대
- 트랙터, 콤팩트, 이앙기 등을 갖추고 영농단계별 기계화체제 구축
- 벼짚, 규산질 등으로 지력을 증진하고 고품질 다수확 품종인 동진, 일품 등을 식부하여 지난해 전국 평균 507kg보다 14% 증수된 578kg/10a 달성
 - 어린모 기계모내기로 못자리 관리일수를 줄이고 효율적인 물관리 및 예방위주의 제초제 사용으로 노동력 절감

IV. 주요 보완과제

1. 장기적으로 주곡인 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적정수준의 농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함
 - 2004년까지 논면적 1,100천ha(벼재배면적 920천ha) 보전
2. 우수 품종 확대재배와 지력증진을 계속해 나감으로서 양질미의 단위면적당 수량증대가 이루어져야 함
3. 농작업위탁이 보편화됨에 따른 영농효율의 저하를 방지하고 적정위탁료를 책정할 필요
4. 농기계 과잉투자를 방지하여 이미 갖고 있는 농기계 활용도를 제고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야 함
5. RPC의 건조·저장시설 확대 등으로 수확기 물벼 수매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미질향상은 물론 인력절감 필요
 - 건조저장시설 : ('96) 25개소, ('97) 64개소
6. 병충해 방제등 공동작업 체계를 갖추어 효율화할 필요
7. 전업경영체, 소규모 농가등 쌀 생산 농가유형별로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노력
8. 정부의 쌀 시장개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

V. 2단계 쌀산업 경쟁력제고대책 추진방향

과제와 기본방향

- 그동안 1단계 양정개혁과 쌀 산업대책에 의한 시장기능 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개선성과를 토대로 장기적 개방에 대비한 구체적, 실천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시장활성화 및 RPC등 민간유통 확대에 따른 수매·방출등 수급관리 및 가격등 조절,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 및 민간유통체제로 전환
 - 장기적 시장개방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격 및 품질면에서 대외 경쟁력을 확보
 - 경영체 유형별로 적정 모델을 설정하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강화
 - 전업경영체는 지속적 경영개선과 기술개발, 규모확대를 통해 생산비 절감에 주력
 - 특수쌀 생산농가는 고품질 쌀로 특화하여 소득실현
 - 소규모 농가는 RPC와 계열화하고 공동작업등 투입노동시간을 줄이면서 다양한 작목재배로 소득증대 실현

<쌀산업의 발전방향>

- 5~10ha 규모의 전업경영체
 - 18만원/80kg 내외의 가격조건하에 쌀 농업을 주도
- RPC 중심으로 수확부터 유통·판매까지 일관처리
- 500kg 이상의 고품질 다수확 품종 중심으로 재배가 이루어지고, 산지간 품질경쟁으로 외국산 쌀에 대한 품질 경쟁력 확보

추진방안

□ 경쟁력의 주체인 전문경영체가 쌀산업발전을 주도해 나갈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간의 기능과 역할의 분담

○ 정부의 역할은 경영체가 할 수 없는 공공적부분을 마련하고 경영체 스스로의 발전을 지원하고 발전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데 한정

< 정부의 역할 >

- ① 생산기반정비·용수개발 등 인프라 확충
- ② 첨단기술개발, 경영·유통 정보등 우량종자 보급, 서비스 제공
- ③ 농지구입, 기계화, 생산유통시설 설치 및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
- ④ 농지, 시장·유통, 조직화 등 효율적인 제도장치 마련
- ⑤ 식량안보 비축, 수입관리, 대외협상 등 국가이익 보호

○ 경영체는 정부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기술, 경영능력 향상을 통해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의사결정을 하고 시장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경작규모 등 유사한 여건하에서도 경영체별 생산기술, 경영방식 차이에 따라 생산비, 경영비, 소득수준의 격차 발생
- 시장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 경영체의 기술과 경영능력이 향후 성공여부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경영체의 역할 >

- 경영개선 목표(Bench Marking)를 설정하고 기업적 마인드에 의한 농업 경영
- 경영체 스스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경영목표와 실적을 비교·분석하여 경영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

※ 정부는 경영체가 건전히 발전될수 있도록

- ① 경영체 발전단계별 개선 목표 제시
- ② 경영체의 투자 소요자금을 종합자금 지원 방식으로 지원
- ③ 경영개선을 위한 전문지도·상담서비스 제공

□ 중소농의 경우 작목반이나 RPC를 중심으로 한 협업적 생산유통 체계를 형성

- 개별농가의 규모확대 없이도 생산수단의 대형화, 생산체계의 효율화, 계획적·조직적 토지이용 및 관리가 가능토록 유도
- 아울러 인력절감을 통해 생산품종의 다양화, 타산업 종사 등 경영의 복합화를 통해 농가소득 보완

< 사업내용 >

- 품종통일에 의한 미질 확보
- 종자공동 확보
- 공동병충해 방제
- 대형농기계를 활용한 경운·수확
- 수확후 판매까지 일관체계 이용 등

축 산 업

I. 축산업 현황	77
II. 경쟁력강화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시책	79
III. 추진성과와 보완과제	83
IV. 우수 경영사례 분석	88
V. 향후 축산여건 변화와 전망	98
VI. 경쟁력강화를 위한 축산정책 추진방향	99
VII. 양축농가의 경영방향	112

여 백

I. 축산업 현황

1. 축산물 소비와 생산동향

가. 소비부문

□ 소득수준 향상과 동물성단백질 수요증가로 축산물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대

- '85년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를 합쳐 1인당 14.4kg 소비하던 것이 '90년 19.9kg, '96년 28.7kg으로 연평균 6.3% 증가

※ 육류 1인당 소비량 변화

- 쇠 고 기 : ('85) 2.9 → ('90) 4.1 → ('96) 7.1
- 돼지고기 : ('85) 8.4 → ('90) 11.8 → ('96) 15.3
- 닭 고 기 : ('85) 3.1 → ('90) 4.0 → ('96) 6.2
- 계 : ('85) 14.4 → ('90) 19.9 → ('96) 28.7

- 우유·유제품 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

- 1인당 소비량 : ('85) 23.8kg → ('90) 43.8 → ('96) 54.5

나. 생산부문

□ 가축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농가수는 감소추세

	사육두수		농 가 수		호당 평균사육두수	
	'92	'97. 6	'92	'97. 6	'92	'97. 6
한 우	천두		천호		두	
젖 소	2,019	2,927	585	501	3.5	5.8
돼 지	508	545	28	19	18.1	28.7
닭	5,463	6,589	99	29	55.2	227.2
	73,324	101,499	188	179	390.0	567.0

2. 주요 축산물개방 현황

가. 쇠고기

- 2000년까지 수입제한제도를 유지하되, 수입쿼타는 매년 증량
- 2001.1월에 관세 41.2%로 수입자유화
- 업계간 자율거래제도(SBS)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은 매년 증량하고 부과금 상한선은 매년 감축

	'94	'95	'96	'97	'98	'99	2000
수입쿼타 (SBS물량비율)	106천톤 (20%)	123 (30)	147 (40)	167 (50)	187 (60)	206 (70)	225 (70)
관세	20%	43.6	43.2	42.8	42.4	42.0	41.6
부과금상한	95%	70	60	40	20	10	0

※ SBS(Simultaneous Buy and Sell)제도 운영 : 8개 쇠고기 수입·유통단체로 하여금 부과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쇠고기를 직접 수입·판매토록 함.

나. 일반우 (살아있는 소)

- 2000년까지 수입을 제한하되, 쿼타는 인정하지 않고, 2001년에 관세 41.2%로 수입자유화 (쇠고기와 같음)

다. 쇠고기 육포 및 식용설육(꼬리, 족, 머리)

- '97.7월부터 육포는 관세 77.6%, 식용설육은 19.4%로 수입자유화

라. 돼지고기 및 닭고기(냉동)

- '97.7월부터 돼지고기는 관세 33.4%, 닭고기는 30.5%로 수입자유화 되었음.

※ 냉장 돼지고기·닭고기는 '94년에 기 자유화

마. 우유 및 유제품

- 모든 유제품이 '96.7월 이전에 수입자유화 되었음.

Ⅱ. 경쟁력강화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시책

1. 사육기반확충 및 원가절감 추진

□ 시설현대화·규모화등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추진

- '93년까지는 개별사업으로 추진했으나, '94년부터 단위사업을 통합하여 기반시설, 사육시설, 조사료생산기반 조성 등 사육시설 현대화와 규모화에 필요한 자금을 농가에게 종합 지원
- '92~'96년간 31천농가에게 13,086억원 지원

□ 축산단지조성

- 축산여건이 불리한 지역 또는 소규모 사육농가들의 축사시설을 단지화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고 사육두수를 늘리므로써 공동경영과 규모화의 잇점을 살리고자 '91년부터 추진, 181개소 조성

□ 가축계열화사업

- 계열주체가 농가에게 병아리, 자돈, 사료등 생산자재를 공급하고 농가가 생산한 가축을 다시 수집하여 도축·가공·판매하는 사업으로 양축농가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으므로써 안정적인 경영 도모
- '96년까지 한우 2개소, 돼지 13개소, 닭 14개소 조성

□ 가축개량 추진

- 2001년까지의 주요가축별 일당증체량, 산유량, 육질등에 대한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한우개량단지 육성, 가축능력검정, 전문종돈업 육성 사업등을 추진

□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수립·추진

- '96년 주요가축전염병 9종에 대한 연도별 근절목표(2001~2002)를 설정하고 생산자단체 중심의 공동방역단 설치, 검진·예찰 활동 강화등 종합대책 수립·추진

□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 적용

- '95년 10월 부업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영세율 적용후 '96.1월 적용대상 부업규모를 20% 확대(예, 소 30두 → 36두)
- '97.7월부터 전 사육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 전면 적용

2. 축산물유통구조개선 추진

□ 축산물 등급제 실시

- 한우고기·돼지고기의 품질에 따른 차등 가격형성으로 농가의 고급육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95년도에 도축·도매단계에 축산물 등급제를 도입하였으며 '97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중

□ 생산·도축·가공·판매기능이 연계된 선진국형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추진중

- 2001년까지 국내 소·돼지의 30~40%를 냉장·부분육으로 처리한다는 목표하에 대형 7개소, 중형 5개소를 선정하여 연차별 완공 추진
 - '97년중 대형 2개소 완공, '98년중 대형 3개소 완공계획

□ 육질등급별 차등가격제 정착을 위한 도매공판 기능 강화

- 중간수집상의 횡포를 방지하고 계통출하를 확대하기 위해서 '92년이후 신규로 4개소 건설완료(나주, 고령, 제주, 김해), 1개소 건설 추진중(부천)
 - 공판기능외에 위생적인 도축시설 및 부분육 가공시설 병행 건설
- 축산부문 민간도매시장 이전건설 추진('96~'98 : 2개소)

□ 식육소매단계 구분판매제 실시('97.1)

- 도매단계의 축산물등급제 전국 확대시행에 이어 소매단계 식육판매업소에서도 식육을 부위별·등급별로 구분하여 판매토록 하고, 국내산 쇠고기에 대하여는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한우·젓소·육우고기로 구분 판매토록 의무화함

□ 한우전문판매점, 브랜드육 가맹점 설치 확대 및 기존 정육점의 시설개선을 통해 냉장육 유통 확대

- 한우전문판매점 설치 : ('97까지) 548개소 설치
- 브랜드육 가맹점(축협, 한냉등) 설치 : ('96~'97) 282개소
- 일반식육업소 냉장시설개선 : ('95~'96) 401개소

□ 불법·부정축산물 유통단속 강화로 유통거래질서 확립

- 수입육, 젓소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단속 지속 추진

3. 축산물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 강화

□ 도축단계에서 유해성잔류물질 검사 강화 및 미생물오염도 검사 실시

- '96.7월부터 쇠고기·닭고기, '97.1월부터 돼지고기에 대한 항생물질·합성항균제·농약등 17종의 잔류물질 규제검사 실시
- 도축·도계장에서 작업과정별로 육류를 채취,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하여 과정별 오염원 추적·차단 도모
 - '96년 총균수, 살모넬라균, 대장균에 대해 연간 1,500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실시

□ 절박도축제도 개선 및 가축공제제도 도입

- 현장에서 절박도살한 소는 인근지역 도축장으로 출하장소를 한정하고 전두수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실시토록 의무화함
- 폐사축이 절박우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공제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 가입한 가축 폐사시 시가의 80% 까지 보상 ('97년 18개조합 시범사업 실시)

4.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지원 확대

□ '91~'96년간 4,494억원의 시설자금 지원, 설치대상농가 83천개소중 71천개소(85%) 설치로 오염부하량 감소

- 축산폐수오염 부하량 : ('91) 17.0% → ('95) 8.9%

□ 지원금리 인하, 지원한도 확대, 표준설계도 보급등으로 양축 농가 부담경감 추진

Ⅲ. 추진성과와 보완과제

1. 주요성과

가. 생산기반 확충 및 생산성 향상

□ 전업화 촉진 및 기업형 축산 성장으로 경쟁력강화기반 구축

○ 전업규모화 추이(사육농가수)

- 한육우(50두이상) : ('85) 961호 → ('90) 956 → ('97.6) 3,332
- 젖소(50두이상) : ('85) 412호 → ('90) 659 → ('97.6) 1,865
- 돼지(1천두이상) : ('85) 195호 → ('90) 406 → ('97.6) 1,405
- 닭 (3만수이상) : ('85) 168호 → ('90) 272 → ('97.6) 927

○ 축산단지, 계열화형태의 축산 성장

- 축산단지 : 181개소에 1,390농가 참여
 - 한우 49, 젖소 10, 돼지 86, 닭 37개소
- 계열화 : 한우 2개소 18농가, 돼지 13개소 950농가, 닭 14개소 1,400여농가 참여
 - 특히 육계는 계열화업체 중심으로 생산·유통체계 형성 및 이들이 육계산업 발전 선도

□ 주요 생산성지표 상승추세

- 한우 일당증체량 : ('88)0.80kg → ('92)0.91 → ('96) 0.94
- 산 유 량 : ('88)5,151kg → ('92)5,643 → ('96) 5,959
- 돼지 이유두수 : ('88)16.9두/년 → ('92)17.7 → ('96) 19.0

□ 축산물생산액 및 부가가치 지속 증가

- 축산물생산액 : ('92) 46,105억원 → ('96) 69,341
- 축산물 GNP : ('92) 16,111억원 → ('96) 22,893

나. 축산물 도축·가공·유통산업 선진화 촉진

□ 대형육가공장, 계열업체 중심으로 새로운 유통체계 형성

- 기존 재래식 도축장수 감소 및 시설개보수 가속화
 - 도축장수 : ('92) 168개 → ('94) 160 → ('96) 118
- 현대화된 육가공장, 계열업체가 냉장 브랜드육 유통체계 전환을 주도
 - 한냉 중부육가공장, 축협 김제육가공장, (주)하림등
-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된 특색있는 상품의 다양한 유통경로 신설
 - 예) 개군한우, 목우촌, 도드람등

□ 도체등급제 실시, 소매단계 구분판매제도 실시, 한우고기 전문 판매점 확대등으로 품질에 따른 차등가격 형성 및 유통구조 선진화 추진

다. 축산물 품질 및 위생수준 점진적 향상

□ 쇠고기·돼지고기 고급육 출현율 및 우유 1등급 생산비율 증가

- 한우고기 1등급 출현율 : ('93) 10.7% → ('94) 12.7 → ('96) 19.4
- 돼지고기 A,B등급 출현율 : ('93) 36.4% → ('94) 36.7 → ('96) 40
- 원유 1등급(세균수기준) 출현율 : ('94) 61% → ('96) 74.6

□ 축산물안전성 및 위생수준 지속 향상

- '96.7 유해성 잔류물질 규제검사 실시이후 검출건수 감소
 - 소·닭고기 양성반응율 : ('96.7)0.77% → ('96.9) 0.52 → ('96.12)0.20

라. 축산물 수출가능성 확인

□ 시설현대화·단지조성에 따른 규격돈 생산 및 위생적인 도축·가공으로 돼지고기 수출 대폭 확대

○ 수출실적 : ('92) 8.5천톤 → ('94) 11 → ('96) 37

□ 삼계탕 수출에 이어 신선계육 수출 추진

○ 삼계탕 수출실적 : ('92) 27톤 → ('94) 140 → ('96) 227

○ 일부 계열업체의 신선육 수출을 위한 시설설치등 노력 강화

2. 미흡한 점

가. 생산·사육부문

□ 정책자금 지원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부족 및 사후관리 미흡등으로 목표달성 차질사례 발생

○ 축종별로 매년 경쟁력강화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지도·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함

○ 일부 양돈·양계 축산단지의 경우 사육시설의 집단화만 이루어지고 사료·종축의 공동구입, 공동사양관리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 질병 전파가능성만 높아짐

□ 국제 사료곡물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사료 자원의 생산·이용 부진

○ 우리의 사육형태, 기후·토양등에 적합한 구체적인 조사료 확보를 위한 노력 부족

- 사료용 옥수수종자의 경우 아직까지도 80년대초 보급종을 사용

□ 분뇨처리 미흡으로 환경오염문제 상존

-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전체 설치대상농가의 85%가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축산분뇨문제 지속 제기
 - 농가 인식부족으로 설치시설의 미가동등 사후관리 소홀

나. 축산물유통·소비단계

□ 안전성확보를 위한 검사체계 미흡

- '96년부터 비로소 체계적으로 국내산 육류의 유해성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물질이 17종으로 선진국 수준에 미달
- 도축단계에서의 병원성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한 위생지침 제작·보급과 검사업무가 초보단계임
 - 재래식 도축시설과 종사자들의 인식부족으로 도축단계에서의 미생물 오염 등 위생수준이 아직 취약

□ 판매단계

- 영세정육점의 구분 판매시설 부족등으로 소매단계에서 등급별·부위별·품종별 구분판매 미정착
 - 1일 판매량이 적어 대부분의 정육점이 냉동보관·판매를 하고 있어 냉장육 유통이 안됨
- 식육처리종사자의 취급 및 위생처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식품의 상품성을 높이는 기술 부족
 - 부위별 정형방법, 숙성기술, 냉장육 판매인식등 교육·홍보 필요

3. 축종별 정책과제

한 우

- 한우를 개방이후에도 쌀과 함께 농가 주요소득원으로 유지·발전
 - 개방시 예상되는 낮은 가격 수준에서도 농가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원가절감과 품질고급화 노력 강화
- 개방전후 급격한 가격변동으로부터 사육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 등)
 - ⇒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낙 농

- 국내산 우유에 대한 위생·품질 수준향상으로 소비자 신뢰회복
-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재고분유의 조속 처분
 - ⇒ 원유가격 결정제도 개선, 집유선 일원화, 검사공영화 등 낙농 진흥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

양 돈

- 수출산업으로 육성
 - 사육시설 현대화, 규모화 및 질병퇴치 등 생산비절감 노력 강화
 - 사육기술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수출규격돈 생산 확대
- 완벽한 분뇨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 ⇒ 돼지고기 수출확대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양 계

- 시설현대화, 질병근절 등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 닭고기 수출산업화 추진
 - 일본시장을 목표로 삼계탕 수출에 이어 신선육 수출 추진
 - 수출품(2.5~3.0kg) 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 및 도계장 설치 필요

IV. 우수 경영사례 분석

1. 한 우

단지운영

□ 농장 소재지 및 대표자

- 경기 양평군 개군면 개군한우단지 김용봉(46세)외 29명

□ 단지 연혁

- '87. 11 '개군한우초우회' 조직
- '90. 9 개군한우단지 구성
- '91년 고급육 생산을 위한 무혈거세 실시
- '93. 2 농협중앙회에 상설매장 설치, 송파구 잠실동에 직판장 개설

□ 경영현황 및 특징

- '97. 9 현재 30농가가 암소 70두, 거세우 1,100두를 사육
- 사육, 출하, 가공 및 쇠고기 판매 등을 단지중심으로 계열화한 완전협업형태의 단지 운영
 - 일반 사양관리, 직판장 운영등은 회원들이 역할 분담
 - 축사 개·보수, 송아지 및 자재구입 등은 공동으로 실시
- 총자본액 : 1,196백만원
- 장비보유 내역
 - 트랙터, 스키드로더, 퇴비살포기, 조사료수확기, 컷터기,경운기 등

□ 성공요인

- 번식과 비육의 일관사육으로 생산비 절감
 - 지역내 다수 번식농가로부터 우수한 자질의 밀소를 구입
 - 골격이 좋은 송아지를 선발, 160kg 까지 조사료 위주 사육
 - 생체중 490kg에 이르는 비육전기에는 배합사료 급여량 다소 증량
 - 비육후기에는 배합사료로 집중비육시켜 생체중 620kg 안팎에 출하
- 직영매장을 운영하여 유통비용 최소화 및 고유브랜드화
 - 직영매장외 한우고기전문판매점 및 전문식당등과 직거래
 - 개군한우 상표등록증 교부(등록 제 286885호), 한우고기 품질 인증마크 획득(개군거세한우 10-30-07)
- 고급육생산을 위해 월 3회 이상 거세 실시
- 꾸준한 홍보 실시
 - 각종 영농회, 축산인 모임, 언론사 등을 통한 시식회등

□ 경영성과

- 거세우 일당 증체량 : 0.8kg
- 출하체중 : 620kg
- 1등급 출현율 : 80% ('96전국평균 19%)
 - 개방 전년도인 2000년까지 95%까지 높일 계획

개별농가

□ 농장 소재지 및 대표자

- 경남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풍전농장 백철승(45세)

□ 경영현황 및 특징

- 비육우 80두, 번식우 27두('97.5현재)의 비육·번식병행(일관사육) 농가로 67년 농업부산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소사육 시작
 - '92년 선도농가로 선정되어 2억원의 시설자금을 지원받아 축사 신축후 한우전업농으로 전환
- 조사료 생산에 역점
 - 생산비 비중이 높은 농후사료비를 줄이고, 번식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조사료 중요성 인식,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주력
 - 호맥(4,500평), 이탈리아안그라스(2,000평), 옥수수(2,500평) 재배
 - '96조사료생산장비 공동활용단지로 선정, 대농기계 구입 활용
- 사육형태
 - 번식우의 경우 인공수정을 실시, 생산 암송아지는 시장에 출하하여 현금화하고 일부는 대체용으로 육성
 - 비육용은 자가생산과 가축시장을 통해 확보하여 거세실시하고 약 20개월간 비육시켜 580~630kg에 도매시장 출하
- 축사형태
 - 통풍 및 채광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방식으로 건축
 - 우사바닥에 톱밥을 깔아 발효처리, 전량 유기질 비료화

□ 경영성과

- 1등급 출현율 : 80%내외, 번식율 : 87%(전국 평균 82.4%)
- '96 축산소득 5천만원, 경종소득 1천만원 달성

2. 양돈산업

양돈 계열화

□ 사업체명 : 도드람 중부 양돈 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진길부)

□ 도드람 양돈계열화의 현황

○ 구 성

- 전업농 규모의 양돈농가가 자발적으로 모여 사양관리 통일, 전산 기록 경영 및 공동출하하여 고품질 브랜드육을 판매하는 조합형 양돈계열화 조직

○ 운영체계

- 도드람 사료공장 : 양질의 주문사료를 염가공급
- 도드람 계열생산 : 종돈공급, 전산화, 사양관리지도, 도드람 연수원 운영
- 도드람 유통 : 위생도축, 부분육·육가공품 생산, 수출, 국내판매등

○ 경영원칙

- 종돈통일, 사료통일, 사양관리통일, 가공유통의 통일

○ 계열농가구성 : 농가수 305호, 호당 평균사육두수 1,500두 정도

○ 참여지역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 참여자격 : 돼지 500두 이상 사육농가

□ 생산성 향상 방안

○ 종돈통일 : 다비육종 종돈장과 계약 공급

○ 사육형태 : 2~3 site 형태로 사육하며, 번식농가당 3~9농가에게 자돈을 공급하여 육성·비육을 계약 생산

- 사양관리 전산화 : 번식돈의 수정, 산자수, 도태율, 폐사율등 사양관리에 대한 전산화를 하여 경영진단 및 개선
- 도드람 연수원 운영 : 조합원에게 양돈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조합원의 자질 향상
- 사료통일
 - 자가배합사료 공장을 운영하여 사료의 품질향상, 염가공급으로 사료비를 10% 절감
 - 사료비 절감액 : 1,500두 사육규모 농가당 연간 15,750천원 절감
- 규격돈 생산
 - 출하규격 105~120kg, 수돼지는 거세, 비육후기사료 급여
 - 출하일령 : 110kg를 170일에 출하
- 현장 순회 전문기술지도
 - 컨설턴트로 전담수의사 3명 배치
 - 월 2~3회정도 사양관리, 전산화, 분뇨처리, 방역 등에 대한 현장기술 지도
 - 전산화결과에 대한 경영진단 feed back체계 구축

□ 출하방법

- 도드람 조합에서 생산한 돼지는 도드람 유통에서 출하를 전담 운영
- 1개 도축장을 지정·운영하고, 13개 수출업체와 계약생산 출하

□ 가공장 운영

- 도드람 가공장을 운영하며 수출용 및 내수용 가공
- 처리방법
 - 안심·등심은 수출용 가공, 목심·삼겹살은 냉장부분육으로 가공, 앞·뒷다리 잔여육은 육가공품으로 제조

□ 판 매

- 도드람 유통에서 전담 운영하며, 수출과 내수판매로 운영
- 브랜드 사용 : “도드람 포크”
- 수출실적 : ('96년) 204톤, 125만불, ('97년) 400톤, 200만불
- 내수판매
 - 도드람 포크 가맹점 25개소, 백화점등 상설매장 70개소에 공급
 - 냉장브랜드육으로 판매하여 30%정도 고가판매
 - 앞·뒷다리 잔여육은 육가공품으로 제조하여 상품성 제고

□ 경영성과(1,500두 규모 농가기준)

-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경영합리화된 모델 계열화 사업체로서 양돈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계임.
- PSY(연간 이유자돈 두수) : 21.3두(일반 17두)
- 연간소득(호당) : 123.7백만원(일반 64.3백만원)

□ 중점 추진사업 내용

- ONE STOP SERVICE 기반구축 : 도드람 양돈센터 건립
- 질병진단기능의 보강 : 질병진단센터 설립 추진
- 돈 분뇨의 논 토양시비 연구사업
- HACCP를 이용한 돈육 안전성 확보
- 양돈사양기술을 영상화하여 회원들의 전문지식 향상
- “도드람 포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경쟁력 제고

돼지고기 수출

□ 농장소재지 및 대표자

- 경북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황정농장 김성곤(50세)

□ 경영현황 및 특징

- 경영규모 : 모돈 250두, 육성·비육돈 3,000두
 - '82년 돼지 100두로 시작하여 당시 가격파동으로 어려움을 겪은후 '94년 5월 36농가와 함께 『영천돼지고기 품질개선 단지』를 조성하여 수출용 규격돈 생산
 - 연간 출하두수 : 4,800두(수출규격돈 생산 : 4,000여두)
- 사양관리 특징
 - 현대식 돈사시설 개선(자동화) : 330백만원(음자 200, 자담 130)
 - 비육돈 후기사료를 철저히 급여하여 항생제등 잔류물질이 없는 규격돈 생산
 - 과학적인 사양관리프로그램에 의거 연간 이유자돈수 향상(16→22.1두)
 - 수태지는 전두수 거세, 종돈 통일
 - 단지 공동방역사업단을 구성하여 철저한 방역관리
 - 분뇨처리시설을 완벽히 하여 환경오염 방지

□ 경영성과

- 수출용 규격돈생산 합격률 향상 : 합격률 83%(전국평균 58%)
- 연간 200백만원 농가소득 달성
 - 석탑산업훈장 수상('96년 새양축가 상)

3. 낙농산업

개별농가

□ 농장소재지 및 대표자

- 경기 화성군 팔탄면 해창리 흥원목장 신덕현(49세)

□ 경영현황 및 특징

- 사육두수 94두중 경산우 44두('97.8현재) 사육농가로 '79년도(23두) 부터 젖소 사육 시작
 - '92년 선도농가로 선정되어 1억원의 시설자금을 지원받았고, '96년 젖소경쟁력제고사업을 통하여 목로개설, 용수개발, 싸이로 등의 시설을 갖추어 젖소 전업농으로 전환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 젖소의 생산성 향상, 번식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주력
 - 사료작물포 : 12ha(옥수수 10ha, 수단그라스 2ha)
 - '96년 조사료 생산장비 및 싸이로 6기(400톤)설치
- 사육형태
 - 경산우의 경우 인공수정 실시, 생산수송아지는 육성하여 시장에 출하
 - 암송아지는 육성하여 착유우로 우유생산
- 축사형태
 - 통풍 및 채광효과를 높이기 위해 후리스톨 축사 신축
 - 분뇨처리시설은 저장액비시설(처리능력 1,000톤)

□ 경영성과

- 원유1등급 출현율 : 95%내외(전국 평균 : 75%)
- 연간 두당산유량 : 9,500kg(전국 평균 : 5,959kg)
- '96 소득 100백만원 달성

4. 양계산업

육계계열화

□ 사업체 현황

- 전북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주)하림(대표자 김홍국)
- 종업원수 : 1,270명
- 1996년 매출액 : 1,643억원

□ 경영현황

- 육계 계열사육
 - 계열사육농가 : 600여 농가, 18,000천수
- 종계 계열사육
 - 계열 사육농가 : 53여 농가, 700천수
- 육계자체사육 : 700천수

□ 경영특징

- 국내 최초의 완전 수직계열화 체계 구축으로 통합경영 실시
 - 종계사육시설, 배합사료공장, 도계가공장, 계육가공공장 등을 통합 운영
- 지역내 600여 농가와 계열사육 계약을 체결, 병아리를 공급한 후 생산된 육계를 다시 모집하여 가공·판매
 - 농가는 안심하고 사육에만 전념

□ 경영성과

- 계열참여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 기여('96 농가평균 34백만원)
- 국내 최대의 육계계열화 체계 구축, 소비량의 약 25% 공급
 - 육계계열화사업을 바탕으로 음식물찌꺼기 사료화산업 등에 진출
- 향후 일본에 신선육 수출예정으로 시설현대화 추진

개별농가

□ 농장소재지 및 대표자

-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장암리 56번지 일죽농장 박승봉(75세)
 - 아들 박종서(40세) 경영 참여

□ 경영현황 및 특징

- 개방화에 대비코자 재래식 계사를 철거하고, '94년도에 시설개선 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전자동화시설로 계사를 신축
 - 무창 고상식 전 자동화시설의 계사면적 350평(산란계 3만수 규모)
 - 금년내에 전 자동화 계사 400평을 추가로 신축하여 중추 27,000수 입식 예정
- 최신식 전 자동화 계사시설로 경영·관리의 합리화
 - 사료급여, 급수, 집란, 선란 등의 작업을 자동화하여 관리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계란 생산
 - 점등, 온도 및 환기의 자동조절과 모니터식 외부관리로 질병 예방에 유리
 - 고상식 계사시설로 계분처리 용이
- 계란판매는 '89년부터 서울경기양계조합 집하장에 전량 출하하므로써 유통경로 단축 및 안정적 판로 확보
- 아들내외를 포함한 가족노동중심으로 농장을 관리하는 2대 경영 사례 농가임

□ 경영성과

- 매일 2만개정도의 계란생산으로 '96 축산소득 4천만원
 - 내년 3월경부터는 매일 4만개정도 생산 예정

V. 향후 축산여건 변화와 전망

□ 축산물 소비증가세 지속 전망

- 선진국 1인 소비량을 고려할 때 축산물 소비량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1인당 소비량예측 : ('96) 28.7kg → (2001) 34.7 → (2004) 37.3
 - ※ '95년기준 : 미국 97.1kg, 호주 78.4kg, 대만 51.8kg, 일본 31.3kg

□ '97.7 돼지고기·닭고기, 2001년 소·쇠고기 개방으로 축산물시장 완전 자유화

- 소비증가가 더이상 국내생산기반 확장으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소비자의 비교·선택에 좌우
- 비효율 농가의 탈락등 빠른 구조조정을 거쳐 축산업 전체의 성장 또는 축소모습 결정

□ 축산물 품질과 위생수준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대

- 가축사육의 규모화·집단화에 따라 질병감염 기회는 증대되는 반면, 소비자들의 위생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
- 개방시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가격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국내산의 품질·안전성과 위생수준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

□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축산분뇨 규제 강화

- 분뇨처리기준 지속 강화로 생산기반 확대 애로 및 비용 상승
- 특히 기존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미흡으로 신규 축사시설 설치시 인근 주민 반대등 사업추진에 애로

VI. 경쟁력강화를 위한 축산정책 추진 방향

< 기본 방향 >

- 규모화·전업화등 원가절감 노력을 지속 추진하되 인력육성, 개량, 방역에 역점
 - 규모화된 양축농가 선정, 경영능력 향상 추진
 - 개량, 방역 등 공공성있는 부문 지원 강화

- 도·소매단계 유통체계를 개선, 국내산과 수입품간 차별화에 대한 실효성 확보
 -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음식점·정육점 등)가 직접 연결된 차별화된 유통경로 신설등 새로운 유통체계 구축
 - 대형매장 중심의 제품화된 정육유통 활성화

- 품질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추진체계 마련
 - 국내식품중 축산물이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사육부터 도축·가공·운송·판매 전과정에 대한 총체적 점검 및 제도확립
 - 축산물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의미 전달, 소비자 우려 불식 노력 지속 추진

- 해외소비기반 확보를 위한 수출시책 지속 추진
 - 규격돈 생산체계, 효율적인 도축·검역체계, 냉장육 수출체계 구축
 - 닭고기 수출을 위한 시설개선 및 기술향상 노력 강화

1. 축산전업농의 체계적인 육성·관리

□ 축산전업농 및 육성대상자 선정

- 축종별로 전업농 자격요건과 성장가능 요건을 설정하고 농가의 신청을 받아 선정
 - 탈락 및 신규지정과 농가별 경영실태를 Data Base로 구축·관리
- 규모화·시설현대화·시설교체등 정책자금 집중 지원
- 부업농은 자구노력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지원

□ 경영·기술상담과 지도기능 강화

- 축협중앙회에 양축지원본부 설치, 사육·경영·환경·방역 등 분야별 전문가 확보 및 지역 축협의 지도기능 강화
- 벤치마킹제를 도입, 농가별 시설현대화 정도와 기술수준등을 평가하여 취약 부분에 대한 집중 지원 실시

2.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시책 재점검 추진

가. 가축개량사업 확대

□ 가축검정사업 확대 실시

- 발육 및 육질능력이 우수한 한우 보증수소(종모우)를 선발하여 인공 수정용 정액을 채취·공급하는 능력검정사업 강화
- 산유능력 검정확대로 고능력 젖소 확보
- 돼지와 닭에 대해서는 농장별·품종별 경제능력 검정을 실시하고 성적을 공표하여 양축농가에게 우수축 구입자료 제공

□ 한우개량단지 운영체제 개선

- 면단위 지역중심 개량에서 10두이상 규모화된 농가중심으로 점진적 전환
 - '96년말 현재 암소관리두수 : 175천두(개량단지 130, 개량농가 45)
- 개량단지 지도원의 점진적인 감축으로 1단지 1지도원 배치

□ 전문종돈업 육성으로 고능력 청정종돈 생산·보급기반 구축

- 기술수준이 높은 원종돈(GGP)농장과 종돈(GP)농장의 연계(Group화)
 - GGP농장 7개소와 연계된 GP농장 45개소 집중 육성
- 2000년대 국내 종돈수요량의 40% 수준을 전문종돈업체에서 공급

□ 가축개량 신기술 개발·보급

- 수정란이식, 쌍자송아지 생산등 개량기술 개발·보급으로 송아지 생산비 절감
- 소 및 돼지에 대한 인공수정기술 보급으로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년간 1,000명)
 - 전업규모 소 사육농가에 대한 자가인공수정교육(년간 500명)

나. 조사료 생산기반 대폭 확충

□ 농가유형별 조사료 생산 모델 설정·보급

- 번식농·비육농가 유형별로 다양한 조사료 확보방안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재배 이용기술등을 집중지도
 - 번식우 30두의 경우 전작형(청예옥수수 + 호맥)과 답작형(벼 + 호맥)으로 나누어 조사료 적정 공급량 및 재배면적 산정 제시

□ 목초 및 사료작물재배용 우량종자 공급체계 확립

- 신품종 개발, 채종포 및 정선시설 확보등으로 국내산 청예용 옥수수종자 생산 공급추진 (종자공급소)
- 종자수급상 부족량은 낮은 관세로 수입 공급(축협중앙회)

□ 조사료생산의 기계화 촉진으로 인력난 해소 및 작업능률 향상

- 조사료 기계화단지를 육성하고 장비구입자금 지원
- 경영규모에 적합한 표준규격 및 Model설정 보급
-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조사료 기계·장비 공동구매 추진

다. 축종별 경쟁력제고, 축산단지, 계열화사업 조정

□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 비육농 위주의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은 축소하되 조사료기반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번식농 경쟁력향상에 지원
 - 사육규모별로 축사와 조사료 확보 모델을 패키지로 제시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 돼지·닭은 시설현대화를 위해 계속 지원하되 돼지의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지원

□ 축산단지는 기존단지의 내실화와 경영개선에 중점

- 신규대상자 선정시 부지확보 등 선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축산기술연구소의 사전 심사기능 강화
- 축산단지에 대한 축협중앙회의 경영·기술컨설팅 강화
- 축산경영자금 지원 확대 ('97 : 5,200억원, '98 : 6,200)

□ 계열화사업 지속 추진

-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한 사업으로 추진
 - '96현재 13개소에서 국내 생산의 8% 담당
 - 2004년까지 25개소를 육성, 국내생산의 20% 이상 담당
- 육계는 기존업체의 내실화 추진
 - 현재 계열화업체가 14개로 국내생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 육성보다는 기존업체의 내실있는 발전 도모

라. 가축전염병 근절시책 강화

□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수립·추진

□ 양축농가와 생산자단체 중심의 시군 지역별 공동방역사업단을 편성, 자율방역 정착 유도

- 공동방역사업단에 방역차량, 백신보관 냉장고, 소독기등 지원
- 설치계획 : ('97) 50개소 → ('98) 100 → ('99) 150

□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 및 검진사업등 확대 실시

- 돼지콜레라 : 2001년 청정화 선언 목표
 - ('97~'98) 예방접종 전두수 실시→예방접종중단→양성돈 검색·살처분→근절
- 돼지오제스키병, 뉴캐슬병과 우결핵등에 대해 예방접종 및 검진 강화

□ 소독시설 및 검사장비 확보 추진

- 도축·도계장 수송차량과 소독시설 등
- 가축위생시험소 방역차량, 소각로, 검사장비 등

□ 민간병성감정기관 확대 지정

- 전국의 수의과대학과 민간업체 연구소를 질병감정기관으로 지정·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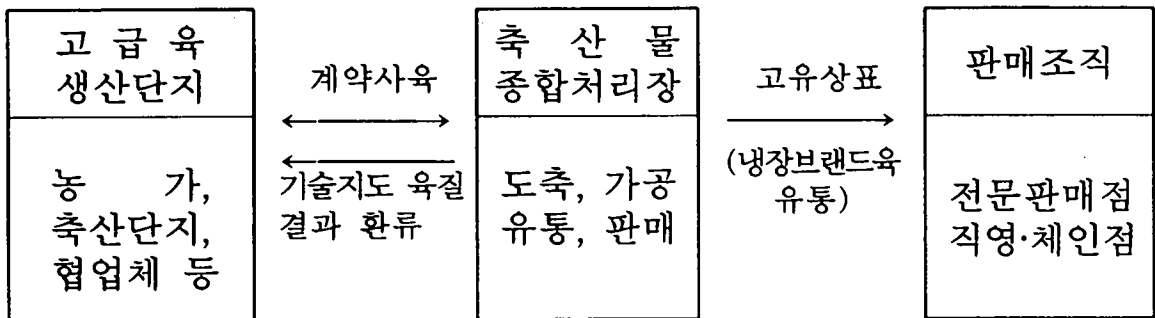
3. 축산물유통구조 개선

가. 축산물종합처리장 중심의 브랜드육 생산·유통체계 확립

□ 2001년까지 권역별로 건설되는 12개 축산물종합처리장이 단순한 도축·가공기능 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을 연결하는 계열주체로서의 역할 수행

- 2000년 국내산 돼지고기·쇠고기 유통량의 30~40% 공급
- '97~'98년 대규모 5개소, '99~2000년 중·대규모 7개소 준공
- 대규모시설 1일 소 100두, 중규모 1일 소 50두 도축 및 가공

□ 생산·유통모델



- 생산농가·단지등에 자돈·송아지공급 또는 입식자금을 지원하고 출하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원료 확보
- 품종, 사육, 관리방법 등의 통일로 규격화된 상품생산 및 신선 냉장의 브랜드육 생산
 - 도축처리후 등급판정 결과를 해당농가에 통보하여 사양관리개선 도모
-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직접 연결되는 전문음식점, 대형 식육판매업소 등 차별화된 개별 유통경로 신설(한우의 경우)
 - 직판점, 가맹점 설치 (50%)
 - 축협, 한냉등에 대형 부분육 할인매장 설치 (10%)
 -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한우전문점등을 통한 판매(40%)

나. 돼지고기·쇠고기 부분육 상장·경매제 도입

- 1단계로 축협공판장에서 자체가공한 부분육 시범상장 실시
 - '98년부터 김해공판장, 부천공판장(부분육가공공장 병설 운영)에서 시행
 - ※ 특히 돼지고기 수출잔여육을 제값받고 처리하기 위해 긴급
- 2단계로 도매시장에서 브랜드 업체별 제품의 등급별, 부위별 상장·경매 실시 추진

다. 육류도체등급제 조기정착 추진

- 등급판정 확대시행으로 냉장육유통 및 고급육 생산 유도
 - '98년부터 소는 전두수 예냉하여 등급판정확대 시행
 - '97년까지는 관내용에 한하여 예냉없이 간이도축판정 허용
 - 등급판정시행으로 육질고급화 유도
 - 쇠고기 1등급 출현율 : ('96) 19.4% → (2004) 40
 - 돼지고기 A,B등급 출현율 : ('96) 40% → (2004) 65
- 등급판정기준 개정 및 판정결과의 실용화 추진
 - 고품질 한우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상위등급기준을 세분화함
 - (현행) 육질 4개등급 → (조정) 육질 5개등급(현행 1등급을 세분화)
 - 등급판정결과의 전산화처리 및 농가통보로 고급육생산을 위한 feed back체계 구축

라. 쇠고기의 품종별 구분판매제 실효성 확보

□ 한우·육우·젓소고기의 구분판매제 조기정착을 위해 시설현대화 추진

-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설치 : (2000년까지) 700개소
- 한우고기 브랜드육가공업체 가맹점설치 : (2000년까지) 900개소

□ 구분판매 단속 지속 실시

-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식육전문가 100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지정하여 운영

마. 식육처리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확대

□ 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 식육처리기술훈련원을 건립하여 직업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
- 건립기간 : '97년말까지 완공하여 '98년 개원계획
- 교육방법 :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전문교육실시
- 교육인원 : 연간 200명 교육 ('97까지) 660명 → (2004까지) 2,000명

□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소지자 배출

- 2000년까지 3,000명을 배출하여 식육유통업계 핵심인력으로 활용
- 자격증 소지자에게 정부시책 유통개선사업비 최우선 지원

□ 정육점 신규개설 기준강화

- 정육점의 시설을 규모화하여 냉장육판매 및 구분판매시설 확보
 - 시설면적기준 설정 : (현행) 기준없음 → (조정) 10평이상 면적 확보
- 신규 정육점개설 요건에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만 허용
 - '98년 관련법령을 개정, '99부터 적용계획(기존 정육점 영업 인정)

4. 축산물위생수준의 획기적인 향상 추진

□ 도축단계에서 시행하는 항생제·합성항균제등 유해성 잔류물질의 검사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

- ('97) 17종(농약등 추가)
- 2004년까지 CODEX 기준인 87종으로 확대

□ 육류중 미생물검사 확대등 도축단계 미생물오염방지대책 추진

- 검사대상 미생물 및 건수 지속 확대 추진
 - ('97) 4종 3,000건 → ('98) 6종 4,000건
- 작업장 경영자 및 종사자가 지켜야 할 위생행동규범을 담은 도축·도계장 위생관리요령 제정·시행

□ 가축공제제도 확대 추진

- 가축공제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 가입한 가축폐사시 시가의 80%까지 보상하여 폐사축의 절박우 둔감등 부정축산물유통 근절
 - 대상가축 : 한우·젖소
 - '97년 18개조합 시범사업 실시,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본격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 '97년중 도축장 2개소에 대해 시범사업 실시후 전국 도축장으로 단계적확대 실시

5. 축산물수출시책 강화

□ 돼지고기를 수출산업으로 정착

- 수출규격돈 생산확대방안 수립 추진
 - 거세실시유도, 출하체중(110kg)증대, 사육단계별 사료 구분급여 지도, 소모성 질병근절등 종합대책 수립 추진
- 위생적인 도축·가공시설을 갖춘 업체와 고품질 생산농가(지역)를 계열화하여 냉장육 수출활로 개척

□ 닭고기 수출 노력 강화

- 돼지고기와 같이 수출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일부 선도업체 중심으로 수출을 추진중이나
 - 현재 사육시설과 기술 미비로 규격이 미달되고 위생문제로 수출이 안되고 있음
 - 국내생산 닭고기 : 1.5~1.8kg/수, 일본수출품 : 2.5kg/수 이상
- 수출용 생산시설 및 도계·가공시설을 최우선하여 지원하고 축산기술연구소 중심으로 출하체중 증대와 사양기술개발 등 연구사업 추진
- 수입국과의 위생조건 협의 및 작업장 승인등 통상노력 강화

□ 고품질 한우고기 및 생우수출 추진

- 한우고기 수출추진으로 개방시대 한우산업의 경쟁력향상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 수행
 - 단순한 가격대비시 대일 수출가능성은 있으나 일본소비자가 요구하는 높은 품질과 위생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성패 좌우
- 허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출정착시까지 포장비, 운송비등 기타 경비와 원료구입자금 지원 검토

6. 축산분뇨의 완벽처리로 환경오염방지

가. 추진목표

-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저해 요인 최소화
- 축산분뇨처리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제고
 -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처리
-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농업으로 환경친화형 축산 추구

나. 주요 추진시책 방향

(1) 가동불량시설의 운영정상화 추진

- 축산분뇨처리시설 정기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강화
 - 정부지원 분뇨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실태 정기조사
 - 농림사업 평가와 연계하여 매년 전수조사
 - 가동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부실운영시 불이익 조치 강구
- 축산분뇨처리기술 상담의 내실화 추진
 - 축협의 컨설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중 앙 회 : 축산단지 등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 상담·지도
 - 일선조합: 기존 「종합서비스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일반농가 지도
 - 축협중앙회 컨설팅지원부내에 분뇨처리 애로상담코너 설치
- 시설설치 업체의 사후봉사 기능강화
 - 표준계약서 보급 및 사용권장, 기계고장시 응급조치요령 등 조치요령 제작보급
 - 현행 시설설치업체의 사업추진 현황(서비스 대상품목 및 기간 분쟁사례 등)을 객관성있게 조사하여 양축농가에 자료로 제공

(2) 수분조절재 수급안정 및 축분퇴비 수요확대

□ 톱밥등 수분조절재 수급안정 도모

- 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적게 쓰는 축사설치 및 처리방법 보급
 - 스크레파형태의 축사 설치 유도
 - 하우스 건조 발효법, 화학반응공법 등 자체 발효·건조방안 보급
- 톱밥 등 수분조절재 공급 지속 확대
 - 톱밥제조시설지원, 임도개설 확장 등

□ 축분퇴비 수요개발 및 판매확대

-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을 위해 객토지역에 축분퇴비 공급 추진
 - “농토개량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객토대상 들녘에 유기물함량이 3%(현재 2.5%내외)정도가 되도록 살포(ha당 5톤) 추진

□ 축분퇴비의 유통질서확립 및 품질개선

- 축산단지·농가의 퇴비성분 분석, 제품별 특성을 살려 경종 농가에게 선택구매 기회제공
- 축협, 농협에 축분퇴비 유통정보 교환체계 확립

(3) 적정처리시설 설치 유도

□ 축산분뇨처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의 내실화로 부실시공 방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성 검토·심의시 축산분뇨 처리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질심사를 위해 시·군환경부서 직원을 심사 요원으로 참여
- 사업대상자 선정후 분뇨처리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화

□ 지역별·축종별 우수처리 농가를 선정하여 신규설치농가의 견학용으로 활용

- 지역적응성, 경제성, 처리능력, 편리성 등을 검토하여 축종별·권역별로 선정,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설중 다년간 경제성 및 처리능력이 입증된 시설을 표준화하여 적정처리모델 정착

□ 자금지원방식 개선

- 축사와 분뇨처리 시설자금의 연계체제 구축
- 정화시설과 퇴비화시설자금 병행지원 추진

(4) 규제강화에 따른 제도개선 및 시설보완

□ 법령 및 제도개선

- 액비살포 기준면적 현실화 추진
 - 돼지 : (현재) 2,310m²/두 → (조정) 470~900m²
- 상수원보호구역내 젓소운동장에 비가림시설 설치허용
 - 상수원 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시 반영토록 실무협의 완료

□ 신규규제 대상농가 및 노후시설에 대한 설치자금 지원

- 규제강화에 따라 신규 규제 대상농가 지원
 - 규제미만 → 간이 : 27,330개소, 간이대상 전국확대 : 30,390개소
- 내구연한 경과 등 노후시설의 단계적 교체

Ⅶ. 양축농가의 경영방향

1. 정부 지원체계의 변화

□ UR협상이후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경쟁력강화 대책은 개별농가의 시설설치를 위한 자금위주의 지원이었음.

-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양축농가의 시설현대화와 규모화가 상당수준 진전되어 경쟁력강화 기반을 구축
- 다만, 지원과정에서 적절한 투자규모 설정, 자금관리와 같은 규모화에 상응한 경영능력 부재로 부실초래 또는 부도사례 발생 등의 문제도 함께 제기됨.

□ 앞으로 2단계 경쟁력강화대책에서는 1단계 대책을 기반으로 하여 경영주체의 능력향상, 기술 및 정보화, 각종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둔 산업의 경쟁력제고 추진에 역점

- 능력있는 경영주체를 육성하고 보다 효율적인 제도를 정립하여 민간주도의 산업경쟁력을 높여갈 기틀을 마련
- 경영체별 현재 수준을 평가하여 적절한 수준의 벤치마크를 제공하고 그 차이(gap)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자금, 기술, 정보 등)을 경영컨설팅을 통해 지속 제시
- 지금까지의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농가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가가 필요한 사업을 종합 지원함과 아울러 잘하는 농가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방식도 변경

2. 양축농가의 경영방향

- 궁극적으로 한국축산은 축산농가 개개인의 능력과 경영수준에 의해 평가되고 발전됨.
 -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해주어야 한다는 의존적 태도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인 경영능력과 경영책임을 갖춘 경제주체로서의 역할 인식 필요

- 특히 개방경제하에서는 과거의 수입제한제도, 관세인상 등과 같은 정부의 생산자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가 사라질 수 밖에 없고, 교통과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소비자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음.
 - 결국 경쟁의 심화에 따라 경영을 제대로 하는 자만이 살아 남게 됨으로써 비효율농가의 경우 경영압박을 더욱 심하게 받게 됨.

-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양축농가에게 필요한 부족분 보완 등 보조기능에 그친다는 전제를 갖고
 - 선도경영체의 경영기법을 적극적으로 「모방」 또는 「고속학습」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
 - 더 나아가 한국 축산업을 이끌어간다는 산업주체로서의 능동적인 역할 기대

여 백

원예특작산업

I. 원예특작산업 현황.....	117
II. 경쟁력제고를 위한 그간 추진상황.....	119
III. 추진성과와 보완과제.....	122
IV. 경영우수사례 분석.....	129
V. 원예특작산업의 여건변화와 전망.....	133
VI. 원예특작산업의 정책방향.....	135

여 백

I. 원예특작산업현황

1. 농림업중 원예특작산업비중

- 60년대부터 시작된 공업화 정책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산업구조의 조정을 가져와 국내 총 생산액중 농림업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 그러나 농업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경쟁력이 있는 원예 특작 산업비중은 증가하여 미곡 생산액을 능가하고 있음.
- 농림업 / 국내총생산 : ('85) 16% → ('90) 10 → ('95) 8
- 원예특작산업 / 농림업 : ('85) 22% → ('90) 33 → ('95) 44
- ※ 미곡 / 농림업 : ('85) 34% → ('90) 36 → ('95) 25

2. 생산동향

- 노지채소의 재배면적은 약간 감소한 반면 단수 증가로 생산량은 늘어났으며, 시설채소, 과수, 화훼 등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

	재 배 면 적				생 산 량			
	'90	'95	'96	'96/'90	'90	'95	'96	'96/'90
	천ha			%	천톤			%
노지채소	299	322	311	104	7,660	8,163	7,858	126
시설채소	42	82	77	183	1,017	2,423	2,350	231
과 수	133	174	173	130	1,766	2,300	2,207	125
화 훼	3.5	5.1	5.3	151	2,338억원	5,090	5,531	231
버 섯	0.5	1.2	3.4	680	59	96	94	159
인 삼	12	9	9	75	14	12	10	71

* 화훼 생산량은 생산액 기준임.

3. 소비동향

- 식품소비의 고급화, 다양화에 따라 곡물 소비는 줄어든 반면 채소, 과일, 화훼 등 원예작물 소비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

<원예작물 1인당 소비량 추이>

- 채 소 류 : ('85) 99kg/1인 → ('96) 146 (47% 증)
- 과 실 류 : ('85) 36kg/1인 → ('96) 52 (44% 증)
- 화 훼 류 : ('85) 1,823원/1인 → ('96) 12,224 (571% 증)
- ※ 쌀 : ('85) 128kg/1인 → ('96) 105 (18% 감)

4. 수출동향

- 수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기반확충,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고가 필요

(단위 : 백만불)

	농림산물 (A)	원예작물 (B)	원예작물					버섯·생약
			채 소 류	과 실 류	화 훼 류	인 삼 류	인삼류	
'85	652	99	12	13	1	73	-	
'96	1,829	279	85	63	5	113	13	

5. 수입동향

- 최근 수입개방된 감귤류, 포도, 참다래 등의 수입증가로 농림산물 전체 수입증가율보다 높음
 - '97.7.1자로 오렌지, 기타 감귤류 및 생사가 수입자유화 되므로서 전품목 수입개방

(단위 : 백만불)

	농림산물 (A)	원예작물 (B)	원예작물					구성비 (B/A)
			채소류	과실류	화훼류	인삼류	버섯·생약	
'85	2,420	20	9	7	4	-	-	0.8%
'96	12,021	621	176	323	30	1	91	5.2

II.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그간 추진상황

1. 원예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 추진

가. 현 황

- UR협상이후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을 수립하여 원예특작부문은 시설현대화, 생산성 향상, 유통효율 증진 등을 위하여 집중 투자

(단위 : 억원)

사 업 명	'94~'96		'97		'98(P)	
	사업량	예 산	사업량	예 산	사업량	예산액
계	개소 757	9,756	389	2,769	380	3,395
채소 생산·유통	210	4,515	79	798	68	947
과수 "	300	3,239	150	1,343	150	1,581
화훼 "	45	1,390	15	209	20	371
특작 "	202	642	145	419	142	496

나. 주요 지원내용

- 채소, 화훼 : 유리 및 철판온실, 공동육묘시설, 관정, 저온수송차량등
- 과 수 : 저온저장고, 선과장, 농기계 등
- 특 작 : 버섯 첨단재배시설, 생약가공시설 등

2. 시설원예 사업

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실적

- 농촌노동력 부족 농산물 시장개방 등 여건변화에 대응 주산지 생산자 조직중심으로 현대화된 생산·유통시설을 종합지원하여 자본·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농업 실현 도모

('96년말 현재)

	계	파이프비닐온실	경질판온실	유리온실
전 체(A)	45,943 ha	45,633	60	250
정부지원(B)	1,436 ha	1,154	51	231
B / A	3.1 %	2.5	85.0	92.4

< '97사업 추진계획 >

- 사업계획 : 시설채소 40개소(483억원), 화훼 15개소(209억원)
- 사업내용
 - 생산시설 : 유리온실, 파이프 비닐온실, 육묘장 등
 - 유통시설 : 집하장,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등

나. 중점 추진시책

- 실기위주의 첨단기술 현장교육 등을 통한 우수 경영인력 양성에) 광양유리온실 전문기술교육 훈련과정 운영 : ('96) 120명 → ('97) 250
- 정부지원 경영체 실태분석등 사후관리체계 강화
 - 667개 경영체('91~'95년 지원)에 대한 경영실태 조사·분석
- 원예용 시설·기자재 하자처리제도 수립으로 부실시공예방
 - 단체협약에 의한 책임사후봉사제도 실시등

3. 과수사업 추진

가. 주요 사업내용

- 안정적인 과실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생력형재배기술과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비절감 및 유통효율증대를 위하여 생산, 유통시설을 패키지화 하여 생산자조직에 지원하는 생산유통지원사업과 과수대표생산사업 추진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 생산기반조성 : 품종갱신, 관수시설설치, 농기계 등
 - 산지유통시설 확충 : 저온저장고, 선과장, 집하장 등
 - '97 추진계획 : 150개소, 1,343억원
- 과수대표생산사업
 - 대목구입, 상토조제, 관수시설 설치 등
 - '97 추진계획 : 2개소(200천주), 16억원

나. 중점 추진시책

- 생산비절감과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 과실나무 키낮추기와 밀식재배 추진
 - 유기물 시용, 가지치기, 관배수 등으로 품질향상 유도
-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과실의 신규조원 억제를 위하여
 - 신규과원 조성비 지원중단 : 포도, 감귤
 - 생산조정제 실시 : 감귤(20~25천ha, 600~620천톤)
- 지속적인 수출 추진을 위하여
 - 전문생산단지조성을 통한 고품질 안정생산체계 구축
 - 수출 촉진을 위한 판매촉진 사업비 지원('97 : 2,940백만원)

4. 인삼산업 육성시책 추진

- 국내인삼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다양한 인삼제품의 개발과 가공 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수출 확대
- 생산기반 확충 및 재배법 개선 추진
 - 인삼 식재자금 지원확대로 적정면적 확보
 - ('96) 2,656ha/357억원 → ('97) 3,505ha/449억원
 - 인삼재배 시설현대화와 전용농기계 보급촉진으로 생산비 절감
- 엄격한 품질관리와 수출진흥대책 추진
 - 재배단계에서의 농약 안전사용 지도와 유통과정에서의 품질검사 및 부정유통 단속강화
 - 해외시장에서의 고려인삼 홍보확대
 - 국제 박람회시 고려인삼관 설치, 홍보물 및 시제품 제작배포등

Ⅲ. 추진성과와 보완과제

1. 추진성과

- '90년도이후 원예산업부문에 지속적인 투자확대로 생산성 향상, 전문화 진전, 소득증대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 특히 UR 협상의 불안감과 좌절을 극복하고 WTO체제에 순조롭게 적응하면서 21세기 선진농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수 있음.

가. 생산시설의 현대화와 생산기술혁신

- 시장개방에 대응한 첨단농업, 공세적 수출농업 육성의 필요에 의해 소득작목, 전략산업으로 육성되기 시작한 시설원예산업은
 - '91~'93년 시범단지 조성사업(성장작목 시범단지, 시설채소 시범단지, 화훼 시범단지)과 '94년부터 지원된 생산유통 지원 사업으로 선진국형 시설현대화가 시작됨.
 - 시설채소의 경우 '91년 이동식비닐온실이 70% 이상이었으나 '95년 50%로 낮아진 반면 고정식 온실면적이 30%미만에서 50%까지 증가되었으며 화훼의 경우 고정식 온실이 '95년 85%에 달함.
 - 자동화 시설은 '91년 45ha에서 '96년 1,436ha로 32배나 증가

< 형태별 온실현황 >

계	파이프 비닐온실	경질판 온실	유리 온실
45,943 ha	45,633	60	250

나. 단수증대 및 생산성 향상

- 품종개량 재배기술의 발달 시설재배면적의 증가 등으로 단수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노동투하시간이 감소하는등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음.
 - 1990~1995년사이 채소의 연평균 단수증가율은 6.0%에 달하였고, 자동화 비닐온실은 관행온실에 비해 40%내외의 단수증가, 유리온실의 경우 2~4배가 증가하였음.
- 시설원예작물의 토지생산성은 대부분의 작물이 '90년이후 연평균 10%내외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동화에 의한 노동력 투입절감으로 노동생산성은 많은 작물에서 10%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주요시설 원예작물의 생산성변화 >

		가액(천원/10a, 원/시간)			연평균 변화율(%)		
		1990	1993	1995	'90-93	'93-95	'90-95
오 이	토지생산성	2,578	3,287	4,672	8.4	19.2	12.6
	노동생산성	3,307	5,346	7,930	17.4	21.8	19.1
토마토	토지생산성	2,645	3,309	3,925	7.8	8.9	8.2
	노동생산성	3,184	4,519	5,611	12.4	11.4	12.0
딸 기	토지생산성	2,303	2,725	3,292	5.8	9.9	7.4
	노동생산성	2,662	3,400	4,263	8.5	12.0	9.9
장 미	토지생산성	-	7,663	9,233	-	9.8	-
	노동생산성	-	5,851	7,079	-	10.0	-
국 화	토지생산성	-	4,975	5,059	-	0.8	-
	노동생산성	-	5,956	6,765	-	6.6	-

주 1) 오이, 토마토, 딸기의 경우 반축성작물(오이는 억제)만 대상으로 함.

2) 토지생산성 = 부가가치액/10a,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액/투하노동시간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실, 농축산물 표준소득, 각년도

다. 영농규모화, 전업화 및 전문화 진전

- 채소의 경우 타작목에 비해 수익성이 높아 농가수도 증가하였으나 '91년 이후의 각종 시범사업, 지역특화사업, 생산유통지원사업 등으로 전업농가의 시설면적이 증가하여 호당시설규모가 '90년 대비 '95년에 19.1% 증가
- 화훼의 경우 '92년부터 생산유통지원사업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부분적으로 시범단지사업이 지원됨으로 인해 '95년까지 유리온실 지원(63.2ha)을 비롯하여 자동화 파이프비닐온실이 지원(41.4ha) 되어 호당 시설규모가 6.8% 증가
- 특히 오이, 화훼 등은 1,000평이상 소규모 재배농가가 대폭 감소하고 1,000평이상 농가는 크게 증가

< 시설오이 및 시설화훼의 재배규모별 구성비 변동 >

	시 설 오 이			시 설 화 훼		
	1990(A)	1995(B)	B-A	1990(A)	1995(B)	B-A
1,000평이하 농가 비율(%)	87	63	△24	73	43	△30
1,000평이상 농가 비율(%)	13	37	24	27	57	30

- 채소와 화훼의 경우에는 농가수 면에서도 물론 늘어났지만 전업농의 수가 5년간 각각 38.4%와 43.2%씩 증가
 - 비율면에서는 전업농비율이 다소 감소하고 2종 겸업농 비율 증가

< 전업농 및 겸업농가수 및 비율 변화 >

단위 : 천호 (%)

	전 체		채 소		화 훼	
	1990	1995	1990	1995	1990	1995
농 가	1,767(100.0)	1,501(100.0)	172.4(100.0)	246.6(100.0)	6.4 (100.0)	10.1(100.0)
전 업	1,052 (59.6)	849(56.6)	109.9 (63.8)	152.1(61.7)	4.4 (68.8)	6.3 (62.8)
1종겸업	389 (22.0)	277(18.5)	28.4 (16.5)	39.2(15.9)	1.1 (17.9)	1.8 (17.8)
2종겸업	326 (18.4)	374(24.9)	34.0 (19.7)	55.3(22.4)	0.9 (13.3)	1.9 (19.4)

라. 농가소득 증대

- 시설원예작물은 소득면에서 타작물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자가노동보수 측면에서도 노동력 투입이 적은 쌀 다음으로 높음.
- 특히 시설이 현대화되고 있는 시설채소와 화훼작물, 비가림재배로 인해 적은 노동력으로 단수가 올라가는 포도 등 시설재배의 자가노동보수와 소득은 노지재배되는 타작물에 비해 높은 증가율 시현

<주요 작물별 소득과 자가노동 보수>

	소득 (소득/10a, 천원)			자가노동보수 (소득/자가노동시간, 원)		
	1990	1995	B/A	1990(A)	1995(B)	B/A(배)
시설화훼 (예, 장미)	6,716	11,451 (100.0)	1.7	7,308	11,416 (100.0)	1.6
시설채소 (예, 시설오이)	2,381	6,607 (57.7)	2.8	3,758	9,430 (82.6)	2.5
노지채소 (예, 노지딸기)	685	1,214 (10.6)	1.8	2,507	5,310 (46.5)	2.1
과 일 (예, 포도)	972	2,903 (25.4)	3.0	3,654	10,353 (90.7)	2.8
쌀	411	491 (4.3)	1.2	8,669	15,059 (131.9)	1.7

마. 수출농업의 가능성 확인

○ 생산 증가,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가공품 개발, 유통개선 등으로 수출품목과 물량이 점차 확대

○ 수출시장 및 품목이 다양화 되었고 농가소득 기여가 큰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였음.

- 수출대상국 : ('92) 127개국 → ('96) 142개국

- 새로운 수출품목 개발 : 황금배,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등

- 크게 신장한 품목 :

	<u>'90</u>		<u>'96</u>
채소류	25.1백만\$	→	84.8
배	5.8	→	9.7
화훼류	1.7	→	4.5

○ 농림산물 수출이 민간주도형으로 변화

- '70~'80년대 : 정부주도형(양송이, 생사류 등)

- '90년대 이후 : 민간주도형(채소류, 과일류, 김치 등)

· 수출보험 이용실적 : ('95) 7개업체 4.5억원→('96) 41개업체 323

2. 보완과제

우수사례 분석결과 농업인의 창의성과 경영마인드, 선진기술의 과감한 도입, 정부의 적절한 지원시책 등이 성공의 공동 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금후 정책을 이에 맞추어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가. 품목별 경쟁력제고를 위한 정책은 추진하여 왔으나 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 미흡

- 그동안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으로 원예특작산업은 시설 현대화, 영농규모화와 전문화 등 많은 성과를 나타내었으나
 - 전후방산업의 연계성, 경영기술의 부족 등으로 다소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또한 미래상과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설정 등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하여 성장산업으로서의 정책적 뒷받침이 미흡
- ⇒ 그동안 추진된 품목차원의 접근방법인 1단계 경쟁력 제고 대책을 평가 보완하여 산업차원의 종합적인 발전방안 수립 필요

나. 규모화·전문화된 농업경영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영체별 수준차이가 크고 첨단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미흡

- ⇒ 첨단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생산시설의 현대화·자동화 지원강화
- 시설채소는 0.5ha 이상규모의 개별경영체 16천호, 2.5ha이상 규모의 법인경영체 5천개소 육성으로 전체생산량의 70% 담당
 - 화훼는 0.5ha이상 규모의 개별경영체 5천호, 5ha이상 규모의 법인 경영체 5천개소 육성으로 전체생산량의 50% 담당
- ⇒ 전문경영체 경쟁력제고를 위해 창업 및 사후 경영지원 체계의 강화
- 전업농 육성사업과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종합자금화
 - 전문경영체에 대한 경영컨설팅 기능 강화
 - 경영발전단계에 따른 목표관리 방식의 지원체계 확립

다. 기술·자본 집약산업으로 발전 잠재력이 높은 시설원예산업의 체계적 발전전략 미흡

- ⇒ 해외 의존도가 높은 채소종자 및 종구의 자급화 추진
 - 방울토마토('95)0%→(2004)50%, 백합종구('96)80%→(2004)100%
- ⇒ 시설원예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 에너지 절감형, 환경친화형, 청정생산기술 개발·보급
 - 자동제어시스템, 개폐장치 등 시설현대화 관련 주요자재의 국산화
 - 재배공정 전문화(육묘와 재배의 분리)로 노동생산성 향상
 - = 정부지원 공정육묘장 : ('96) 24개소 → (2004) 93
- ⇒ 기자재산업, 육묘산업 등 전후방 산업의 육성

라.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나 소비지에서 차별화 되지 못하여 농가의 생산의욕이 저하

- ⇒ 포장센터 중심으로 표준화·규모화 출하에 대한 지원확대
- ⇒ 예냉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지원확대로 콜드체인시스템 조기정착
- ⇒ 소비지 대형소매점과의 계약재배 등 알선 및 직출하 지원
 - 우수 고품질 생산농가에 대한 마케팅 지원

마.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이 부족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전략 미흡

- ⇒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을 위하여 오이, 토마토 등 수출전략품목에 대한 품종개발, 대규모 수출농단 시범조성 및 기존 수출단지의 정비 지원
- ⇒ 대상지역별로 차별화된 해외시장 전략개발 즉, 수출지역별 전략 품목 및 기술개발 지원확대

IV. 경영우수사례

- 종구의 자급화 신기술을 개발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원가를 절감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
 - 단근 편집 기술을 개발하여 우량묘 대량생산(공주원에영농조합)
 - 백합종구를 자급화하여 생산비 절감(이천화훼단지)

- 생력형 시설 및 기술을 응용한 재배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소득향상
 - 키낮은 사과 밀식재배로 생산비 절감 (사과재배농가 정낙진)
 - Y자덕, 점적관수 설치로 노력절감 및 품질향상(배 재배농가 김우재)

- 첨단유리온실, 종합환경 제어시설 설치 등 시설을 현대화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생산
 - 전 면적 유리온실로 고품질 장미생산(김제 애농화훼단지)

- 제품의 차별화 및 브랜드화 한 마케팅 전략으로 소득 향상
 - 양액재배상추를 고급브랜드로 출하(청화산 영농조합)

- 철저한 선별·규격화로 품질관리를하여 고품질의 수출규격품을 생산하고 연중 분산 출하로 수취가격 증대
 - 백합줄기의 경도, 줄기의 길이 등 수출규격품 생산(이천화훼단지)
 - 자동선별기를 활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규격품 생산(김제 애농화훼단지)
 -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연중계획 출하로 수출가격 제고(배 재배농가 김우재)

【 공주원예영농조합】

일반현황

- 위 치 : 충남 공주시 정안읍 석송리 117
- 대 표 자 : 공주원예영농조합법인 이재덕
 - 법인설립일자 : '94.4.7, 자본금 : 120백만원
- 총사업비 : 775백만원(국비194, 도비58, 시비136, 융자232, 자담155)
- 생산시설 : 유리온실 1,500평 ('94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 주요품목 : 접목묘(오이, 수박, 참외, 토마토), 일반묘(고추, 토마토, 상추, 가지), 양채류(메론, 파세리, 셀러리, 피망 등)

소득분석('96)

(단위 : 백만원)

사업분야	매출	경영비	소득
육묘사업	1,693	1,395	298

성공요인

- 신기술 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
 - 접목기술 쇄신(단근편집)으로 우량묘를 대량 생산하여 원가절감 및 판매가격 제고

【 청화산 영농조합 】

일반현황

- 위 치 : 경북 상주시 화북면 임석리 산6-1
- 대 표 자 : 청화산영농조합법인 임정도
 - 법인설립일자 : '94.11.18, 자본금 : 23백만원
- 총사업비 : 1,982백만원(국비495, 도비149, 시비346, 융자594, 자부담398)
- 농가별 생산시설 현황 ('94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
 - 생산시설 11동 6,206평, 유리온실 2동 1,925평, PC온실 4동 2,156평, 파이프비닐온실 5동 2,156평
 - 암반관정 : 2공, 74백만원
- 주요품목 : 상추, 케일, 엔타이브, 치커리, 콩나물등 191톤

소득분석('96)

(단위 : 백만원)

총매출	경영비	소득	비 고
650	400	250	상추, 케일, 치커리, 콩나물, 마나리, 엔다이브등

성공요인

- 제품의 차별화 및 브랜드화한 마케팅 전략 채용
 - 양액재배상추를 고급브랜드로 출하하여 고품질 청정채소 이미지 부각

【 사과재배농가 : 정낙진 】

일반현황

- 소재지 : 충주시 신니면
- 재배면적 : 2.9ha
 - 키낮은 사과 밀식재배 : 1.2ha(10a당 165주)
- 품종 : 후지90%, 조나골드 5%, 홍월기타 5%

소득분석('96)

(단위 : 백만원)

조수익	경영비	소득	비고
62	7	55	면적 : 3,500평, 생산량 : 47톤

성공요인

- 키낮은 사과 밀식재배로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
 - 왜성대목이용, 수형을 방추형으로 유지, 수상작업시간 절감
 - 광투과율 증대 및 통풍양호로 고품질사과 생산 → 수취가격 제고
- 인공수정 및 정밀적과 작업으로 균형 착과
- 반사필름 피복 및 적엽, 도장지 제거로 착색 증진

【 배 재배농가 : 김우재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 재배면적 : 2.8ha (Y자 수형면적 : 1.0 ha)
- 품종 : 신 고

소득분석('96)

(단위 : 백만원)

조수익	경영비	소득	비고
90	27	63	생산량 : 22.5톤 (Y자형수형 1.0ha)

성공요인

- '91년 Y자덕, 점적관수시설 설치, 신고품종 식재(1ha)
 - ⇒ 노동력 절감 및 품질향상
 - Y자수형으로 수상작업시간 대폭 절감
 - 광투과율 증대 및 통풍양호로 고품질 배 생산
- 저온저장고 설치, 년중분산출하로 수취가격 제고

【 이천화훼단지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94번지
- 재배면적 : 유리온실 4,173평
- 재배품목 : 백합(카사블랑카, 마르코폴로, 르네브, 시베리아 등)
- 투자현황 : 총사업비 2,915백만원(국고1,588, 지방비760, 자담567)

소득분석('96)

(단위 : 백만원)

조수익	경영비	소득	비고
736	552	181	왕겨를 배지로한 상자재배

성공요인

- '96년까지 종구를 수입에 의존하였으나, 금년부터 국내에서 양구한 개화구를 사용하여 경영비 절감
 - 종구가격(카사블랑카) : ('96)1,800원/구 → ('97)1,200
- 상자재배를 도입하여 토양재배시 발생하는 연작피해를 방지하고 1차 수확후, 상자에 구근이 식재된 상태로 저온처리과정을 거쳐 2차 재배를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 수출을 목적으로 백합줄기의 경도, 꽃봉오리수, 줄기의 길이 등 수출규격품 생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농가소득증대 및 화훼수출확대

【 김제 애농 화훼단지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북 김제시 순동 651번지 (애농화훼영농조합법인)
- 재배면적 : 유리온실 8,162평
- 재배품목 : 장미(노블레스, 산드라, 콘페티, 로데로즈 등)
- 투자현황 : 총사업비4,016백만원(국고966, 지방비966, 융자1,158, 자담926)

소득분석('96)

(단위 : 백만원)

조수익	경영비	소득	비고
45	26	19	일반농가대비 소득이 높음(36%) (일반농가소득 14백만원)

성공요인

- 전면적 첨단유리온실, 양액재배시설 및 종합 제어시설로 고품질 꽃 생산 및 연중 안정생산
- 자동선별기 활용 등으로 고용인력 절감 및 생산비절감
- 화훼 수출경영체 지정 및 운용(장미수출<일본:4백만원>)

V. 원예특작산업의 여건변화와 전망

1. 21세기 농업의 여건변화와 전망

- 개방화가 가속화 되어 세계 농업생산은 부존자원과 기술력의 비교 우위에 따라 특화될 것임
 - 우리나라 농업은 곡물, 대가축 등 토지조방농업이 크게 침체될 것이며, 자본기술 집약적인 원예산업과 중소가축산업이 특화될 것임
- 농업은 생명공학, 신소재 공학이 결합한 대표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며, 첨단기술의 농업부문에 폭넓게 활용될 것임.
- 농업은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지만 생명산업, 기간산업 및 환경산업으로써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
 - 특히 농업관련 전후방산업이 발달하여 농업을 포함한 식품관련 산업의 비중은 매우 클 것임
 - 농자재산업, 가공산업, 유통부문이 전문화, 규모화되고 농업인은 농산물 생산과 상품화에 전문화될 것임.
- 농업인은 첨단기술을 도입, 활용하고 경영능력을 중요시하는 전문경영인으로 자리잡을 것이며, 도시로부터 젊고 고학력의 인력들이 U-턴하는 현상이 잦아질 것임.
- 농촌노동력의 부족 및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생력형 재배 기술보급 및 환경보존형 농업이 발달할 것임.

2. 원예특작산업의 전망

가. 시설원예산업이 농업성장을 주도

- 시설채소(과채류, 엽채류), 화훼, 버섯산업 등 시설재배작물 생산이 농업 부문에서 가장 성장하는 산업으로 정착되어 농업성장을 주도할 것임.

나. 시설현대화 및 재배방식의 첨단화

- 생명공학, 신소재 공학 등 첨단산업의 농업접목으로 온실 등 농업 시설이 현대화, 자동화될 것이며, 생력형·초단기성·초다수성 원예 품종이 다양하게 개발, 보급되어 생산될 것임.

다. 영농규모화와 경영전문화

- 가족농중심의 중규모와 기업농중심의 대규모로 영농규모화가 진전될 것이며, 사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전문경영이 일반화될 것임.

라. 농산물 포장센터 중심의 유통 계열화와 콜드체인 체제 확립

- 대부분 농산물의 산지유통이 농산물 포장센터를 중심으로 농가-포장센터간 계열화체제가 확립되고, 규격상품화가 정착될 것임.

마. 시장개방에 의한 수출입 증대

- 예외없는 관세화로 세계 각국이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자본기술집약적 농산물(시설원예 농산물)이 많이 수출될 것이며, 토지조방적 농산물 등 (곡물 및 노지채소·특작)은 수입이 확대되는 등 농산물의 개방화가 진행될 것임.

바. 전후방 관련산업의 발달로 분업화, 계열화 촉진

- 자재산업, 육묘산업, 가공산업 등 전후방 관련산업이 발달하여 분업화 되고,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생산·유통·수출의 계열화가 촉진될 것임.

사. 생산자조직 중심의 수급 및 가격안정화 추진

- 정부의 직접적인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역할은 거의 없어질 것이며, 그 대신 생산자조직의 수급조정 및 가격안정 역할이 크게 강화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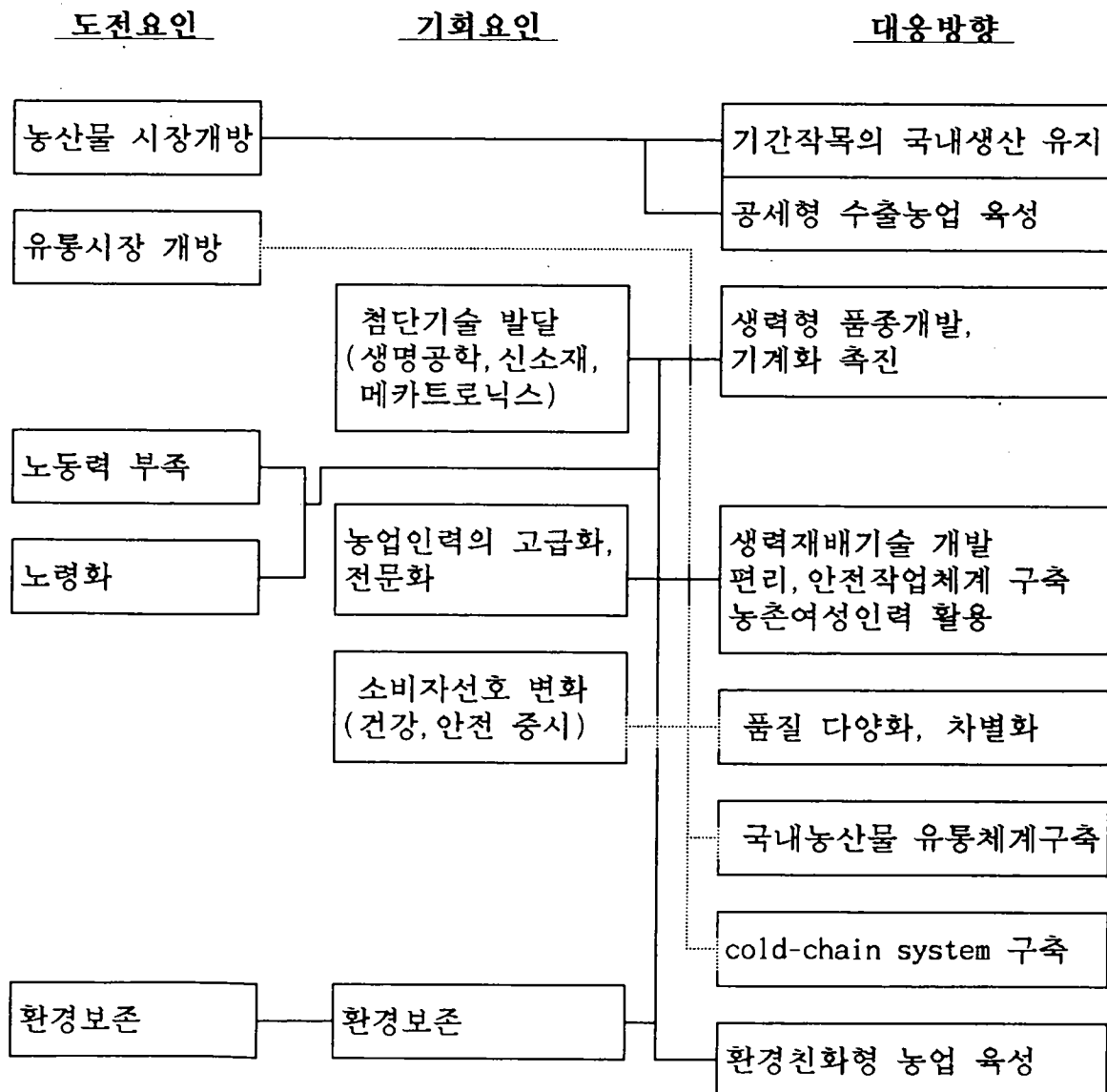
VI. 원예특작산업의 정책방향

1. 원예특작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가. 여건변화에 따른 원예특작산업의 대응방향

- 농산물 시장개방, 농촌노동력의 부족 및 노령화, 환경문제 등의 도전요인과 첨단생명공학기술의 농업부문의 폭넓은 도입, 농업인력의 전문화 등 기회요인이 상존하며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 대응방향을 수립

<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도전요인 · 기회요인과 대응방향 >



나. 정책의 기본방향

1) 정책대상의 차별화로 전략적 정책대응

- 중앙정부 기능이 축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분권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대상(품목, 사람, 분야)에 대한 정책 시행과 투입자를 차별화하여 전략적 정책 대응
- 정책대상의 차별화
 - 정책농산물의 차별화 : 성장품목 집중 지원, 기간품목 보존 지원
 - 대상농민 차별화 : 젊고 유능한 농민 집중 지원, 고령농가 탈락 지원
 - 대상분야의 차별화 : 생산 하부구조·기술개발·상품화촉진·유통 하부구조 등에 집중지원하고,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시장 기능을 존중

2) 기술개발투자 집중 및 기술의 농가보급체계 개편

- 품종개발(생력형, 초다수성, 수출품목)
- 생력형, 안전·편리성을 추구한 기계기술 개발
- 농촌지도기관의 지방직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보급체계 구축
 - 농협의 영농지도기능 확충 지원, 특성화대학의 기술지도체제 구축

3) 정예농업인력 육성

- 전업농 중심의 자금 지원으로 경영마인드를 갖춘 농업인을 육성
- 기술이 축적된 선도농과 젊고 의욕있는 U-턴 인력에 대한 집중 지원

4) 전후방 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집중 지원

- 자재산업, 육묘산업(육묘공장화), 가공산업등 농업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전반적인 농업발전을 도모

5) 수출 촉진을 위한 집중 지원

- 수출지향 전략품목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수출산업화
-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2. 산업별 정책방향

가. 시설채소산업의 정책방향

1) 저비용 고효율의 시설현대화와 생산기술의 상향평준화 유도

- 일시시설의 고정시설 교체 지원
 - 고정시설비율 : ('95) 50% ⇒ (2004) 80%
-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과 양액재배시설의 확대를 통한 환경제어형 시설농업과 환경친화형 시설농업 육성
-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체제 정비와 작목별 기술연구회 조직의 육성으로 재배농가간 기술격차 해소

2) 전문화와 기업화 유도

- 전업농 육성 지원 및 기업형 시설원예사업자의 진입여건 조성
- U-턴 고급농업인력에 대한 벤처기업 육성차원의 지원

3) 전후방산업 육성

- 파복비닐, 환경제어장치 등 농업용 자재산업의 국산화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
- 육묘산업 육성으로 공정 전문화 유도
- 채소의 1차가공 및 cold-chain system에 의한 유통혁신으로 부가가치 증진과 고품질 농산물의 유통 유도

4) 수출촉진 지원 및 수출안정장치 마련

-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일본을 비롯한 채소, 화훼수출시장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5) 정책자금 지원은 용자 중심으로 전환

- 개별농가단위로 이용되는 생산시설과 유통시설(소규모 예냉시설)에 대해 저리용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확대
- 보조는 개별농가에서 투자를 기피하는 일부 공동시설과 엄선된 농가의 유리온실 설치 중심으로 제한

나. 과수산업의 정책방향

1) 생력형 산업으로 발전할 수있는 기반 구축

- 과수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은 비용절감에 최우선 목표를 설정
 - 품종개량 및 생력형 기술체계 개발
 - 왜성화, 밀식형태의 과원구조로 개편
 - 고품질 생산시스템 구축
- ⇒ 소비자 지향적 산업으로 육성

2) 시장경제체제하에 경영체의 자생력을 높일 수있는 여건 조성

- 유망 전문경영체중심의 자금지원 및 기술보급 추진
 - 전업농과 영농조합법인의 생산·유통 및 경영의 전문성을 제고
 - 경영체에 대한 경영지도 및 상담체계 구축
 - 농협 등 생산자조직, 산지유통 및 가공의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공동계산제 및 계열화 적극 추진
 - 산지 유통시설의 이용을 제고 및 산지 가공공장의 활성화 모색
- ⇒ 경영체의 안정적 성장 유도를 통한 자생력 제고

3) 수출의 기업화 및 전문화 유도

- 민간주도형 수출전략 수립
 - 민간의 산지유통계열화를 통한 수출촉진
 - 민간부문의 산지유통참여 지원
- 수출단지의 과원구조개선 우선 추진
 - 대표사업 및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4) 기술 개발 연구 지원체제 유지

-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동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지속

다. 화훼산업의 정책방향

1) 생산성 증대 및 꽃 품질고급화

- 시설의 현대화·자동화 : 토지 및 노동생산성향상, 고품질·고급 화훼생산
- 협업화 : 단계별 협업화 (공동생산, 산지공동판매, 생산에서 유통·판매)
- 분업화 : 육묘, 토양분석, 병충해 방제, 재배관리 컨설팅, 경영관리·분석
- 저에너지형 시설보급

2) 연구·개발 체제의 강화

- 화훼전후방 연관산업의 육성
- 화훼연구 체제정비·강화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강화
- 국립연구기관과 지방·대학·민간연구소의 공동연구 강화·연구 영역 조정

3) 유통구조개선 및 소비기반확대

- 법정 도매시장을 확충하여 권역별 유통분담체계 구축
- 생산자 조합 및 품목별 전문조합의 도매시장 운영참여 확대
- 꽃의 생활화를 통한 소비기반 확대

4) 기업형 전문 경영체 육성

- 경영 및 수출마인드를 가진 전문 기업농 육성
- 고급기술 및 경영지원을 위한 컨설팅 조직 구성운영

5) 수출시장 개척 및 확대

-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정부의 지원강화
- 화훼수출 전문단지의 육성 : 생산·수출계열화

라. 인삼산업의 정책방향

1) 고품질 원료삼 생산기반 확충

- 연차적 식재자금 지원확대
- 생산자단체가 중심이된 경작적지 분양 알선제 도입

2) 규모화 촉진 및 전문경영체 육성

- 인삼농가 규모화 촉진
- 인삼생산 전문 법인경영체 육성
- 인삼재배 신규참여자 및 후계자 육성

3) 생산비 절감

- 기계화, 생력화를 통한 노력비 절감
- 임차료, 종묘비 등 기타 생산비 절감

4) 신품종 육성 및 품질향상

- 신품종 육성 보급 추진
- 인삼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대책

5) 유통효율화 추진 및 가공산업 육성

- 물류표준화 및 유통정보의 효율적 분산
- 인삼류 종합물류센타 설치
- 가공시설 확충 및 시설현대화

6) 수출 진흥

- 수출품의 다양화 및 품질 차별화
- 해외 시장조사 및 홍보활동 강화
- 인삼 수출지역에 대한 통상협력 강화
- 인삼류 수출지원체계 정비